



정책자료 2025-01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최인선 황남희



BIG
DATA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자료 2025-01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발|간|사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에는 0.75명까지 떨어졌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같은 해 20%를 넘어서는 등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05년에 한국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총 네 차례 수립·추진하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만큼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국외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의 경험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및 해외 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폭넓게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미 발간한 국가별 심층 연구를 종합·압축하여 한국 및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최경덕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황남희 연구위원, 최인선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주요 인구통계 지표	11
제1절 인구 규모 및 구성	13
제2절 혼인과 출산	28
제3절 사망	37
제3장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	41
제1절 일본	43
제2절 프랑스	48
제3절 독일	53
제4절 스웨덴	57



제4장 한국 및 해외 4개국의 결혼·출산·육아 인식 비교 63

제1절 인식 조사 개요 65

제2절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68

제3절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81

제4절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88

제5절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96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02

제5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1

Abstract 113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인구 규모 추이(1970-2022)	14
〈표 2-2〉 자연증가율 추이(2000-2021)	16
〈표 2-3〉 연령구조 추이(1970-2023)	18
〈표 2-4〉 중위연령 추이(1970-2023)	19
〈표 2-5〉 부양비 추이(1970-2023)	22
〈표 2-6〉 노령화지수 추이(1970-2023)	25
〈표 2-7〉 성비 추이(1970-2023)	27
〈표 2-8〉 조혼인율 추이(2000-2020)	29
〈표 2-9〉 평균 조혼연령 추이(2000-2020)	30
〈표 2-10〉 출생아 수 추이(2000-2021)	33
〈표 2-11〉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1)	35
〈표 2-12〉 출산 시 모의 평균연령 추이(2000-2021)	36
〈표 2-13〉 조사망률 추이(2000-2021)	38
〈표 2-14〉 기대여명 추이(1970-2023)	40
〈표 4-1〉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영역별 내용	66
〈표 4-2〉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응답자 특성	67
〈표 4-3〉 향후 결혼 의향	69
〈표 4-4〉 응답자 특성별 향후 결혼 의향	69
〈표 4-5〉 향후 출산 의향	71
〈표 4-6〉 응답자 특성별 향후 출산 의향	71
〈표 4-7〉 계획 자녀 수	72
〈표 4-8〉 이상적 자녀 수	73
〈표 4-9〉 가족계획 시 고려 요인	75
〈표 4-10〉 자녀 출산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77
〈표 4-11〉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80
〈표 4-12〉 각 성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정도	81
〈표 4-13〉 가사의 실제 및 적절 분담 비율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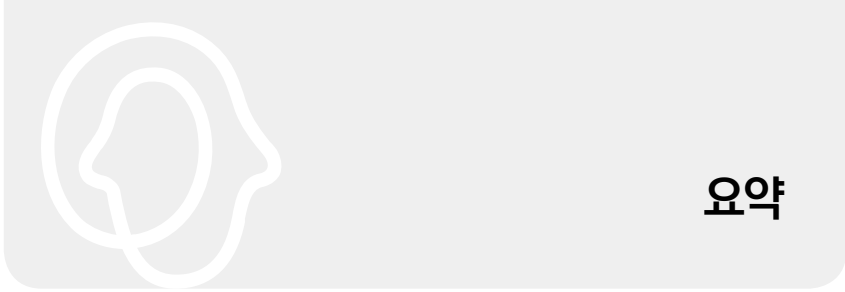
〈표 4-14〉 육아의 실제 및 적절 부담 비율	84
〈표 4-15〉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	85
〈표 4-16〉 응답자 특성별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86
〈표 4-17〉 돌봄의 주체에 대한 인식	87
〈표 4-18〉 인구 변화 및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	89
〈표 4-19〉 사회의 불공정 및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91
〈표 4-20〉 성공 요인에 대한 인식	93
〈표 4-21〉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부모 세대와 본인 세대)	95
〈표 4-22〉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본인 세대와 자녀 세대)	96
〈표 4-23〉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97
〈표 4-24〉 일·가정 양립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100
〈표 4-25〉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인식	102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인구 규모 추이(1970-2022)	14
[그림 2-2] 자연증가율 추이(2000-2021)	16
[그림 2-3] 중위연령 추이(1970-2023)	20
[그림 2-4] 부양비 추이(1970-2023)	23
[그림 2-5] 노령화지수 추이(1970-2023)	25
[그림 2-6] 성비 추이(1970-2023)	27
[그림 2-7] 평균 초혼연령 추이(2000-2020)	31
[그림 2-8] 출생아 수 추이(2000-2021)	33
[그림 2-9] 출산 시 모의 평균연령 추이(2000-2021)	36
[그림 2-10] 조사망률 추이(2000-2021)	38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오랜 기간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에는 0.75명을 기록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같은 해 20%를 넘어섰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 공급 감소, 사회보장 지출 급증, 지역 소멸 우려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이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만큼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는 가족정책, 노동시장 제도, 이민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실험하고 성과와 한계를 경험해 왔다. 따라서 이들의 인구정책 추진 배경, 정책 수단,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각국의 인구정책 현황 검토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해외 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폭넓게 도출하고자 하며, 국가별 연구를 종합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

2. 주요 연구 내용

한국 및 해외 4개국의 주요 인구통계 지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인구의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약 50년간 5개국 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으며, 독일은 총인구가 약 50년간 큰 변화 없이 완만히 증가하여 5개국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유소년 인구 비율이 50여 년간 30%p 이상 하락하였으며, 일본은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 폭이 50여 년간 20%p 이상으로 5개국 중 가장 컸다. 중위연령은 50여 년간 5개국 모두에서 증가하였는데, 증가 폭은 한국(26.8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혼인율은 5개국 모두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초혼연령은 같은 기간 5개국 모두에서 상승했다. 2000년 대비 2021년 출생아 수는 5개국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은 한국(379,527명)에서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출산 시 모의 평균연령은 5개국 모두에서 상승하였으며, 상승 폭은 한국(4.3세)에서 가장 컸다.

한국과 해외 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 및 출산 의향은 국가 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한국은 결혼 및 출산 의향 모두에서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5개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개국 모두에서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긍정적 인식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정적 인식이 동시에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두 항목 모두에서 동의율이 가장 높아, 출산을 막는 현실적 제약이 특히 두드러졌다. 또한, 일과 가사 및 육아의 병행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한국과 일본에서 높게 나타났다. 돌봄에 대한 견해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가족과 사회의 책임을 모두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5개국 중 가장 높았는데,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불안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인식 조사 결과에 비중을 두고 도출하였으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정책은 성별 격차 해소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실제 활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돌봄 관련 정책은 향후 가족 주도의 돌봄을 전제로 하되 사회가 경제적 지원 등의 형태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수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 회복이 출산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용어: 인구정책, 저출산, 인구고령화, 인식 조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 0.75명을 기록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같은 해 20%를 넘어서는 등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 공급 감소, 사회보장 지출 급증, 지역 소멸 우려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이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만큼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국외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기 다른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 온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가족정책, 노동시장 제도, 이민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실험하고 성과와 한계를 경험해 왔다. 따라서 이들의 인구정책 추진 배경과 정책 수단, 그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자산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각국의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네 나라 모두 유럽 및 아시아의 서로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어, 한국의 향후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단순히 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인식 조사에서 도출된 한국 및 해외 4개국 국민들의 인식을 함께 검토하여 한국에 주는 함의를 폭넓게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별 심층 연구를 종합·압축하여 한국 및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에서는 한국과 해외 4개국의 주요 인구통계 지표를 살펴본다. 인구 규모 및 구성, 혼인과 출산, 사망으로 구분하여 5개국의 인구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각국이 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이민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 왔는지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 및 해외 4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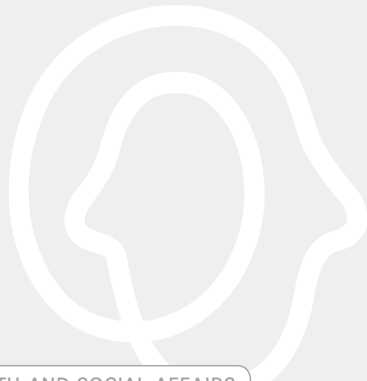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및 해외 4개국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규모 및 인구증감률, 총

부양비, 노령화지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등을 포함하는 인구 통계지표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또한, 한국 및 해외 4개국 국민들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주요 인구통계 지표

제1절 인구 규모 및 구성

제2절 혼인과 출산

제3절 사망

제2장 주요 인구통계 지표

제1절 인구 규모 및 구성

1. 총인구

5개국의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인구 변화의 양상이 확인된다. 2022년 한국의 총인구는 51,628,117명으로, 한국은 인구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5개국 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다만 이러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일본의 총인구는 124,946,789명으로, 일본은 5개국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크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1970년 대비 2022년의 인구증가율은 19.4%이다.

2022년 프랑스의 총인구는 67,942,590명으로 197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5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인구증가율인 33.8%를 기록하였다. 2022년 스웨덴의 총인구는 10,486,941명으로, 스웨덴은 5개국 중 인구 규모가 가장 작다. 인구증가율은 30.4%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인다.

2022년 독일의 총인구는 83,797,987명으로, 독일은 약 50년간 큰 변화 없이 완만한 인구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양상을 유지해 왔다.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으나, 인구증가율은 5개국 중 가장 낮은 7.2%를 기록하였다.

14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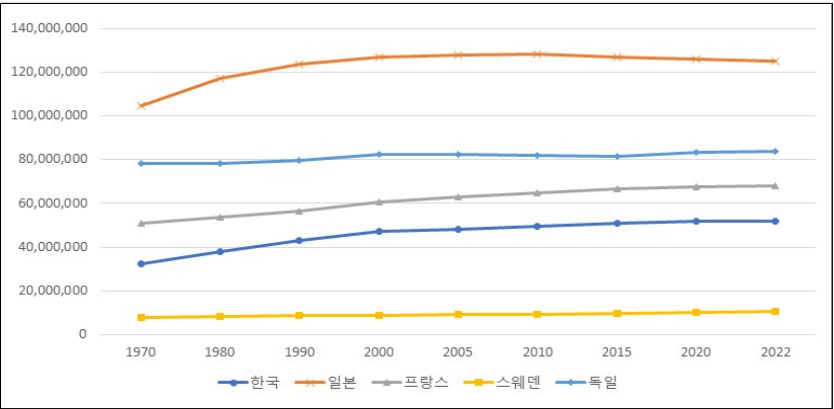
〈표 2-1〉 인구 규모 추이(1970-2022)

(단위: 천 명)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2	증가율
한국	32,240	38,123	42,869	47,008	48,184	49,554	51,014	51,836	51,628	60.1
일본	104,665	117,060	123,611	126,925	127,767	128,057	127,094	126,146	124,946	19.4
프랑스	50,772	53,880	56,708	60,724	62,958	64,773	66,512	67,538	67,942	33.8
스웨덴	8,042	8,310	8,558	8,872	9,029	9,378	9,799	10,353	10,486	30.4
독일	78,169	78,288	79,433	82,211	82,469	81,776	81,686	83,160	83,797	7.2

주: 증가율=2022년-1970년/1970년*100%
출처: “OECD Data explorer[데이터파일],” OECD, 2023,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pulation.html>에서 2025.3.5. 인출함.

〔그림 2-1〕 인구 규모 추이(1970-2022)



출처: “OECD Data explorer[데이터파일],” OECD, 2023,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pulation.html>에서 2025.3.5. 인출함.

2. 자연증가율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구 자연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스웨덴을 제외한 4개국 모두 자연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 일본, 독일은 자연감소 상태에 접어든 반면, 프랑스는 자연증가율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자연증가율은 2000년 8.2에서 2021년 -1.1로 크게 하락하며, 5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율 급감과 고령화의 영향이 반영된 수치로,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자연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의 자연증가율은 2020년 1.8에서 2021년 -5.0으로 6.8 하락하였다. 2021년 기준 자연증가율 -5.0은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이는 일본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고령화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 4.0에서 2021년 0.9로 자연증가율이 3.1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자연증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시사한다. 스웨덴은 2000년 -0.3에서 2021년 2.1로 상승하며, 5개국 중 자연증가율이 상승한 유일한 국가였다. 이는 스웨덴의 인구정책이 자연증가율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2000년 -0.9에서 2021년 -2.7로 자연증가율이 1.8 하락하였다. 감소 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자연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표 2-2〉 자연증가율 추이(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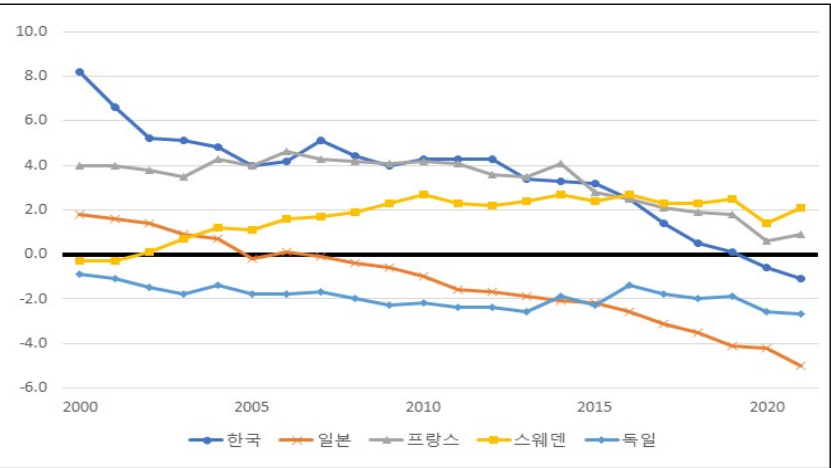
(단위: 인구 천 명당)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21	증감
한국	8.2	4.0	4.3	3.2	-1.1	-9.3
일본	1.8	-0.2	-1.0	-2.2	-5.0	-6.8
프랑스	4.0	4.0	4.2	2.8	0.9	-3.1
스웨덴	-0.3	1.1	2.7	2.4	2.1	2.4
독일	-0.9	-1.8	-2.2	-2.3	-2.7	-1.8

주: 자연증가율은 인구 1000명당 자연 증감한 인구를 뜻함(출생률-사망률)
출처: “인구동태 및 밀도[데이터파일],” 통계청,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5&conn_path=I3에서 2025.4.1. 인출함.

[그림 2-2] 자연증가율 추이(2000-2021)

(단위: 인구 천 명당)



주: 자연증가율은 인구 1000명당 자연 증감한 인구를 뜻함(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
출처: “인구동태 및 밀도[데이터파일],” 통계청,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5&conn_path=I3에서 2025.4.1. 인출함.

3. 연령구조

저출산과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변화의 흐름이며, 각국의 연령구조에서도 그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유소년 인구 비율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년 동안 유소년 인구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20%대에서 10%대로 다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50여 년간 유소년 인구 비율이 31.5%p 하락했으며, 이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5개국 중 한국만이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¹⁾가 아직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정경희 외, 2011). 한편,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18.2%로, 비교 국가들에 비해 현재 수준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 폭이 가장 크며, 향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해 왔다. 1990년에는 유소년 인구 비율이 이미 20% 이하로 하락했으며,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은 2005년을 기점으로 20%를 넘어섰으며, 1970년부터 2023년까지의 증가 폭은 5개국 중 가장 크다.

프랑스와 독일은 연령구조 변화의 양상이 유사하다. 지난 50년간 양국 모두 유소년 인구 비율이 8~9%p 감소했고, 노인 인구는 이와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프랑스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6.8%, 독일은 13.9%

1) 정경희 외(2011)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층이다.

로, 독일이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5개국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의 감소 폭이 가장 작다. 1930년대에 인구 위기 상황을 경험한 스웨덴은 예방적 사회정책을 제시하며 저출산에 대응하였다(이현, 2019: 40). 그 결과 현재 스웨덴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7.2%로 5개국 중 가장 높고, 1970년부터 2023년까지의 감소 폭이 3.6%p로 가장 작다.

〈표 2-3〉 연령구조 추이(1970-2023)

(단위: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증감
한국	유소년	42.5	34.0	25.6	21.1	19.1	16.1	13.8	12.2	11.0	-31.5
	생산가능	54.4	62.2	69.3	71.7	71.9	73.1	73.4	72.1	70.7	16.3
	노인	3.1	3.8	5.1	7.2	9.0	10.8	12.8	15.7	18.2	15.1
일본	유소년	23.3	23.4	18.0	14.4	13.8	13.4	12.8	12.2	11.6	-11.7
	생산가능	69.7	67.5	69.8	68.2	66.0	63.5	60.2	58.9	58.8	-10.9
	노인	7.1	9.1	12.2	17.4	20.3	23.1	26.9	28.9	29.6	22.5
프랑스	유소년	24.8	22.4	20.1	18.9	18.5	18.5	18.2	17.4	16.8	-8.0
	생산가능	62.3	63.7	65.9	65.1	65.1	64.7	62.9	61.8	61.5	-0.8
	노인	12.9	13.9	14.0	16.0	16.4	16.8	18.9	20.7	21.7	8.8
스웨덴	유소년	20.8	19.6	17.9	18.4	17.4	16.6	17.3	17.7	17.2	-3.6
	생산가능	65.5	64.1	64.3	64.3	65.3	65.1	63.0	62.2	62.2	-3.3
	노인	13.7	16.3	17.8	17.3	17.3	18.3	19.7	20.1	20.5	6.8
독일	유소년	23.2	18.5	16.1	15.7	14.5	13.7	13.2	13.8	13.9	-9.3
	생산가능	63.2	65.9	69.0	67.9	66.6	65.7	65.7	64.4	63.3	0.1
	노인	13.7	15.6	14.9	16.5	18.9	20.6	21.1	21.8	22.8	9.1

주: 유소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0~14세) 비율 추정치(Estimates) 자료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 추정치(Estimates) 자료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65세 이상) 비율 추정치(Estimates) 자료
 출처: “부양인구비 및 노령화지수[데이터파일],” 통계청,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conn_path=I3에서 2025.3.5. 인출함.

국가별 중위연령을 살펴보면, 5개국 모두 중위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나, 그 수준과 상승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1970년 17.7세에서 2023년 44.5세로 26.8세 상승하여, 이 기간에 5개국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1970년 28.3세에서 2023년 49.0세로 중위연령이 20.7세 상승하여, 5개국 중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을 기록하였다. 또한 2023년 기준 일본의 중위연령은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중위연령은 1970년 31.4세에서 2023년 41.8세로 약 10.4세 상승하였다. 스웨덴의 중위연령은 1970년 34.4세로 당시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39.9세로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다른 국가들보다 일찍 경험하였으나,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중위연령은 1970년 33.2세에서 2023년 45.1세로 11.9세 상승하였으며, 2023년 기준 5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 2-4〉 중위연령 추이(197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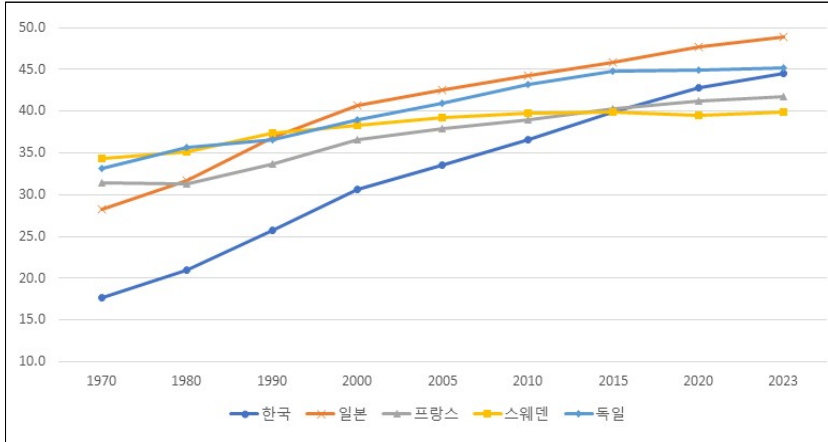
(단위: 세)

국가명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증감
한국	17.7	20.9	25.8	30.7	33.6	36.6	39.9	42.8	44.5	26.8
일본	28.3	31.7	36.9	40.8	42.6	44.2	45.8	47.7	49.0	20.7
프랑스	31.4	31.3	33.7	36.7	37.9	39.0	40.3	41.3	41.8	10.4
스웨덴	34.4	35.1	37.4	38.4	39.2	39.7	39.9	39.6	39.9	5.5
독일	33.2	35.7	36.6	39.0	41.0	43.3	44.8	44.9	45.1	11.9

출처: “median age of population[데이터파일],” UN Population Division Data Portal, 2025, <https://population.un.org/dataportal/data/indicators/>에서 2025.3.5. 인출함.

[그림 2-3] 중위연령 추이(1970-2023)

(단위: 세)



출처: “median age of population[데이터파일],” UN Population Division Data Portal, 2025, <https://population.un.org/dataportal/data/indicators/>에서 2025.3.5. 인출함.

4. 부양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각 국가의 인구학적 변화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총부양비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로, 2023년 총부양비는 1970년 대비 42.4 감소하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총부양비는 41.4로,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유소년부양비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이후 한국의 총부양비는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1980~1990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 총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23년 총부양비는 1970년 대비 26.6 상승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유소년부양비가 13.6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더 큰 폭

으로 증가(40.2)한 데 기인한다. 즉, 조기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일본의 총부양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3년 기준 일본의 총부양비는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유소년부양비가 12.6 감소하고 노년부양비가 14.8 상승하여, 총부양비는 2.2 상승하였다. 총부양비 측면에서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인구구성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정책의 효과가 부양비 변화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웨덴의 인구구성 변화는 프랑스와 유사하다. 유소년부양비는 4.1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12.1 상승하여, 총부양비는 8.0 상승했다. 독일은 분석 기간에 총부양비가 완만한 U자형 곡선을 보이며, 2023년과 1970년 수치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유소년부양비는 감소했고, 노년부양비는 상승했다.

이처럼 유럽 3개국(프랑스, 스웨덴, 독일)은 총부양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한국은 2023년 기준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향후 급격한 상승이 예측된다.

22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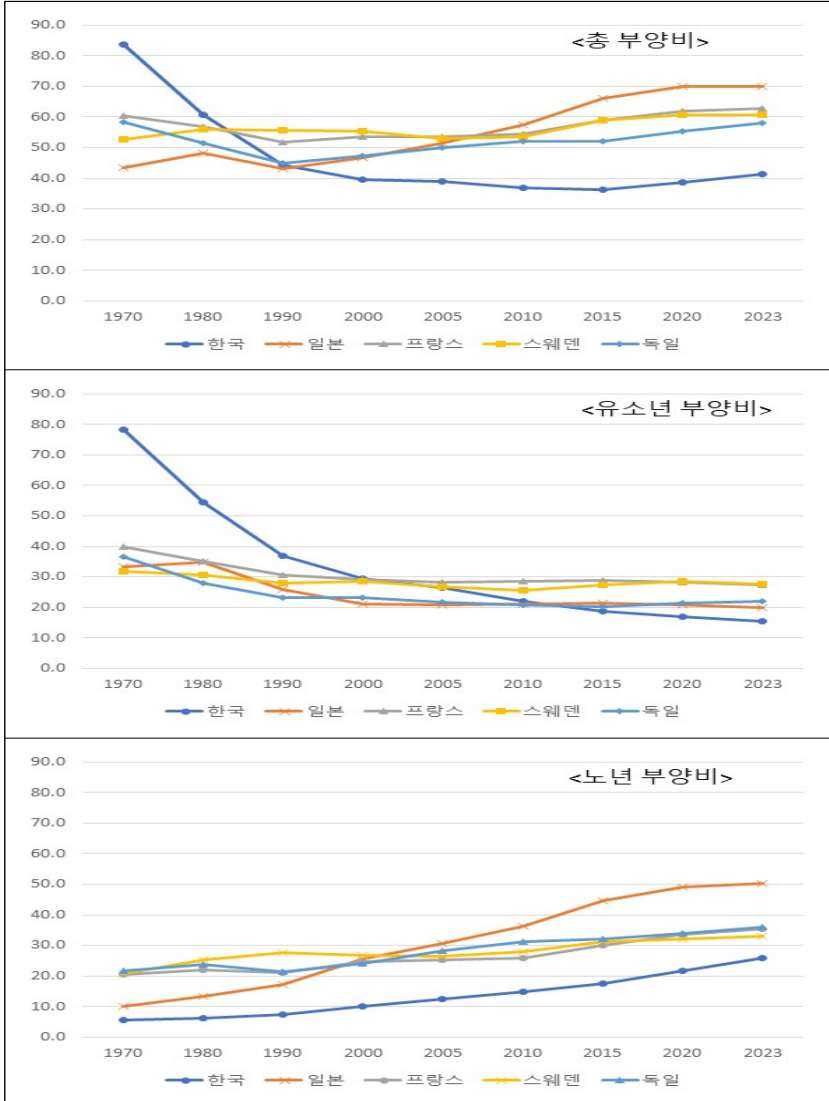
〈표 2-5〉 부양비 추이(1970-2023)

(단위: 인구 백 명당 명)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증감
한국	총부양비	83.9	60.7	44.3	39.5	39.1	36.9	36.2	38.7	41.4	-42.4
	유소년	78.2	54.6	36.9	29.4	26.6	22.0	18.8	16.9	15.6	-62.6
	노년	5.7	6.1	7.4	10.1	12.5	14.8	17.5	21.8	25.8	20.1
일본	총부양비	43.5	48.2	43.2	46.7	51.6	57.4	66.0	69.9	70.1	26.6
	유소년	33.4	34.7	25.8	21.1	20.8	21.0	21.3	20.8	19.8	-13.6
	노년	10.1	13.4	17.4	25.6	30.7	36.4	44.7	49.1	50.3	40.2
프랑스	총부양비	60.5	57.0	51.8	53.7	53.7	54.6	59.0	61.8	62.7	2.2
	유소년	39.9	35.1	30.6	29.1	28.4	28.6	29.0	28.2	27.3	-12.6
	노년	20.6	21.9	21.2	24.6	25.3	25.9	30.0	33.6	35.4	14.8
스웨덴	총부양비	52.7	56.0	55.6	55.5	53.1	53.6	58.8	60.8	60.7	8.0
	유소년	31.8	30.6	27.9	28.7	26.7	25.5	27.5	28.5	27.7	-4.1
	노년	20.9	25.4	27.7	26.8	26.5	28.1	31.3	32.2	33.0	12.1
독일	총부양비	58.3	51.6	44.8	47.3	50.0	52.1	52.1	55.3	58.0	-0.3
	유소년	36.7	28.0	23.3	23.1	21.7	20.8	20.1	21.4	22.0	-14.7
	노년	21.6	23.7	21.5	24.2	28.3	31.3	32.0	33.9	36.0	14.4

주: 유소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0~14세) 비율 추정치(Estimates) 자료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 추정치(Estimates) 자료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65세 이상) 비율 추정치(Estimates) 자료
 $\text{총부양인구비} = (\text{유소년}(0\sim14\text{세}) + \text{고령인구}(65\text{세 이상}) \div \text{생산연령인구}(15\sim64\text{세 인구}) \times 100$
 $\text{유소년부양인구비} = \text{유소년 인구}(0\sim14\text{세}) \div \text{생산연령인구}(15\sim64\text{세}) \times 100$
 $\text{노년부양인구비} = \text{고령인구}(65\text{세 이상}) \div \text{생산연령인구}(15\sim64\text{세}) \times 100$
 출처: “부양인구비 및 노령화지수[데이터파일],” 통계청,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conn_path=I3에서 2025.3.5. 인출함.

[그림 2-4] 부양비 추이(1970-2023)



주: 총부양인구비 = (유소년(0~14세)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 100

유소년부양인구비 = 유소년 인구(0~14세)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노년부양인구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출처: “부양인구비 및 노령화지수[데이터파일],” 통계청,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conn_path=I3에서 2025.3.5. 인출함.

5. 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를 살펴보면, 각국의 저출산·고령화가 서로 다른 속도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1970년 7.2에서 2023년 165.4로 50여 년간 158.2 상승하며, 5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은 1970년 당시 노령화지수가 30.4로 5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23년에는 253.8을 기록하며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고,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프랑스의 노령화지수는 1970년 51.8에서 2023년 129.6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했으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스웨덴은 1970년 노령화지수가 5개국 중 가장 높은 65.6이었으나, 2023년에는 119.1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지표들과 같은 맥락에서, 스웨덴이 인구구조 측면에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독일의 노령화지수는 1970년 59.0에서 2023년 163.8로 100 이상 상승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큰 변동 없이 완만한 추이를 보이며, 향후에도 외생적 충격이 없다면 안정적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 노령화지수 추이(197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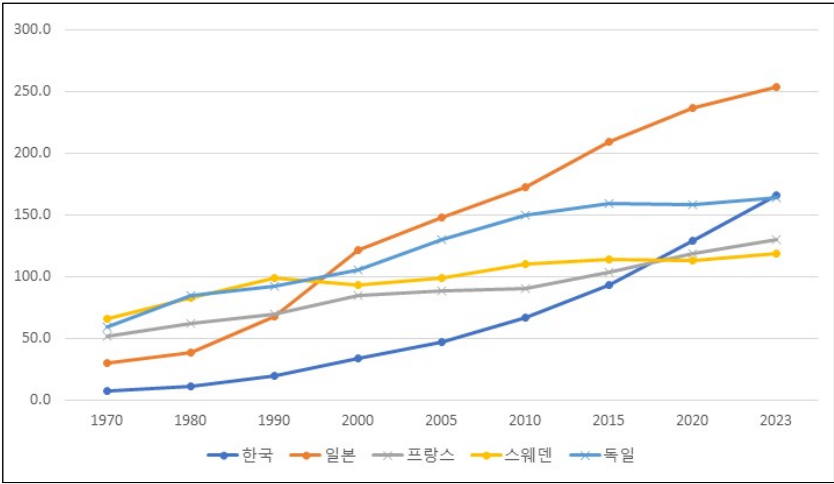
(단위: 인구 백 명당 명)

국가명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증감
한국	7.2	11.2	20.0	34.3	46.8	67.2	93.0	129.3	165.4	158.2
일본	30.4	38.7	67.5	121.3	147.5	172.8	209.6	236.6	253.8	223.4
프랑스	51.8	62.2	69.4	84.6	88.8	90.6	103.3	119.0	129.6	77.8
스웨덴	65.6	83.1	99.1	93.7	99.2	110.1	113.6	113.1	119.1	53.5
독일	59.0	84.5	92.4	105.2	130.1	150.2	159.4	158.7	163.8	104.8

주: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출처: “부양인구비 및 노령화지수[데이터파일],” 통계청,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conn_path=I3에서 2025.3.5. 인출함.

[그림 2-5] 노령화지수 추이(1970-2023)

(단위: %)



주: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출처: “부양인구비 및 노령화지수[데이터파일],” 통계청,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2&conn_path=I3에서 2025.3.5. 인출함.

6. 성별 추이

〈표 2-7〉에는 5개국의 성비 추이를 제시하였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이 확인된다. 한국의 경우,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 100명당 남성 101~103명 수준의 성비가 지속되었으나, 점차 성비 균형을 회복하였다. 2015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100.7명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99.7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근소하게 높아졌다.

일본은 전 기간에 걸쳐 여성 우위의 성비가 지속되고 있다. 1970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96.3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여성 100명당 남성 95.3명을 기록하였다.

프랑스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1970~2023년 전 기간에 걸쳐 여성 우위의 성비가 유지되었다. 1970년 여성 100명당 남성 95.5명에서 2023년 여성 100명당 남성 94.1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스웨덴은 5개국 중 2023년 기준으로 유일하게 남성 인구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국가이다. 1970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99.7명으로 남녀 비율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2023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101.4명으로 남성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독일은 분석 기간에 성비의 변화가 5개국 중 가장 컸다. 1970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89.9명으로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나, 점차 성비가 균형을 회복해 2023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97.5명을 기록하였다.

〈표 2-7〉 성비 추이(197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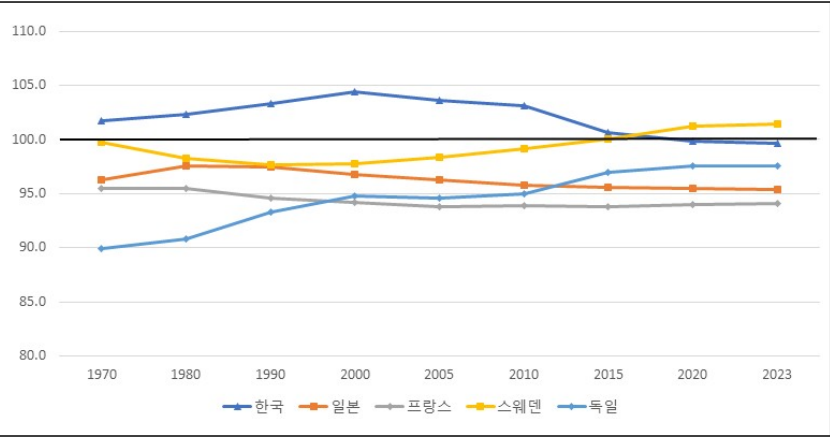
(단위: 여성 백 명당 명)

국가명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증감
한국	101.7	102.4	103.3	104.4	103.7	103.1	100.7	99.8	99.7	-2.0
일본	96.3	97.6	97.4	96.8	96.3	95.8	95.6	95.5	95.3	-1.0
프랑스	95.5	95.4	94.5	94.2	93.8	93.9	93.8	93.9	94.1	-1.4
스웨덴	99.7	98.2	97.6	97.8	98.3	99.2	100.1	101.3	101.4	1.7
독일	89.9	90.8	93.3	94.8	94.6	95.0	96.9	97.5	97.5	7.6

출처: “Sex ratio of the total population[데이터파일],” UN Population Division Data Portal, 2025, <https://population.un.org/dataportal/data/indicators/>에서 2025.3.5. 인출함.

〔그림 2-6〕 성비 추이(1970-2023)

(단위: 여성 백 명당 명)



출처: “Sex ratio of the total population[데이터파일],” UN Population Division Data Portal, 2025, <https://population.un.org/dataportal/data/indicators/>에서 2025.3.5. 인출함.

제2절 혼인과 출산

1. 혼인

제2절에서는 혼인과 출산을 살펴본다. 조혼인율은 5개국 모두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은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조혼인율은 7.0으로 5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4.2를 기록하여 총 2.8 감소했다. 이는 5개국 중 가장 큰 감소 폭으로, 혼인 건수가 한국에서 특히 급격히 줄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조혼인율은 2000년 6.4에서 2020년 4.3으로 2.1 감소하였으며, 프랑스는 같은 기간 5.0에서 2.2로 감소하여 2020년 기준으로 5개국 중 가장 낮은 조혼인율을 기록했다. 다만 프랑스의 낮은 조혼인율은 시민 연대계약(PACs)제도를 통해 사실혼(동거)을 인정하는 등 법률혼 이외에 다양한 파트너십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스웨덴의 조혼인율은 2000년 4.5로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2020년에는 3.6으로 비교적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과 2022년의 조혼인율이 4.6~4.7 수준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의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2000년 5.1이었으나 2020년에 4.5로 감소하여 5개국 중 조혼인율의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조혼인율은 사회 문화적 맥락과 가족 형성의 패턴을 반영한다. 동아시아(한국, 일본)와 유럽(프랑스)의 조혼인율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보여준다. 동아시아 사회는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법률혼이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조혼인율의 감소는 저출산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동거 문화가 상대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혼인과 출산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은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조혼인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십과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이소영 외, 2024).

〈표 2-8〉 조혼인율 추이(2000-2020)

(단위: 인구 천 명당 건수)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20	증감
한국	7.0	6.5	6.5	5.9	4.2	-2.8
일본	6.4	5.7	5.5	5.1	4.3	-2.1
프랑스	5.0	4.5	3.9	3.6	2.2	-2.8
스웨덴	4.5	4.9	5.3	5.3	3.6	-0.9
독일	5.1	4.7	4.7	4.9	4.5	-0.6

주: Crude marriage rates
출처: “SF_3_1_Marriage_divorce_rates[데이터파일],” OECD, 2024, <https://web.archive.org/temp/2024-06-21/69263-database.htm>에서 2025.3.05. 인출함.

초혼연령은 최근으로 올수록 5개국 모두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분석 기간에 증가 폭은 프랑스, 스웨덴, 한국, 독일,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의 초혼연령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초혼연령은 2000년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20년 남성 33.2세, 여성 30.8세로 상승하였으며, 남성은 4.0세, 여성은 4.3세 높아져 여성의 상승 폭이 더 컸다. 일본의 초혼연령은 2000년 남성 28.8세, 여성 27.0세로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2020년에는 남성 31.1세, 여성 29.4세로 남녀 모두 2세 이상 높아졌으나, 여전히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2000년 남성 30.7세, 여성 28.4세에서 2020년 남성 35.2세, 여성 33.1세로, 남성은 4.5세, 여성은 4.7세 증가하여 5개국 중 초혼연령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낮은 초혼인율과 함께, 대안적 파트너십(PACs) 확산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스웨덴의 초혼연령은 2000년 남성 33.0세, 여성 30.4세, 2020년 남성 36.2세, 여성 33.6세로, 두 시점 모두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독일의 경우, 2000년 남성 30.5세, 여성 27.7세에서 2020년 남성 34.0세, 여성 31.2세로 높아져 남녀 모두 3.5세 상승하였다. 독일의 초혼연령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고, 유럽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 5개국 중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처럼 동아시아(한국, 일본)와 유럽(프랑스, 스웨덴, 독일) 간에는 초혼연령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는 초혼인율과 유사하게,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을 비교하면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 폭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한 결혼 지연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9〉 평균 초혼연령 추이(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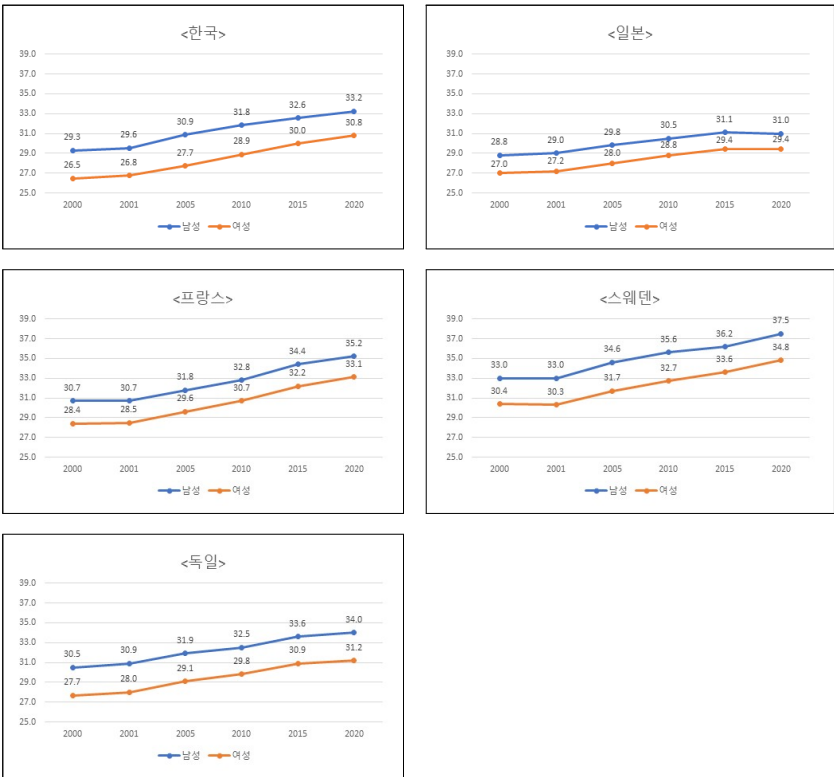
(단위: 세)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증감
한국	남성	29.3	30.9	31.8	32.6	33.2	4.0
	여성	26.5	27.7	28.9	30.0	30.8	4.3
일본	남성	28.8	28.8	29.8	30.5	31.1	2.2
	여성	27.0	27.0	28.0	28.8	29.4	2.4
프랑스	남성	30.7	31.8	32.8	34.4	35.2	4.5
	여성	28.4	29.6	30.7	32.2	33.1	4.7
스웨덴	남성	33.0	33.0	34.6	35.6	36.2	4.5
	여성	30.4	30.4	31.7	32.7	33.6	4.4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증감
독일	남성	30.5	31.9	32.5	33.6	34.0	3.5
	여성	27.7	29.1	29.8	30.9	31.2	3.5

주: 독일의 2010년 자료는 2009년도의 자료임, 2020년의 자료는 2017년도의 자료임. 프랑스의 2020년의 자료는 2018년도의 자료임.
출처: “SF_3_1_Marriage_divorce_rates[데이터파일],” OECD, 2024, <https://web-archive.oecd.org/temp/2024-06-21/69263-database.htm>에서 2025.3.05. 인출함.

[그림 2-7] 평균 초혼연령 추이(2000-2020)



주: 독일의 2010년 자료는 2009년도의 자료임, 2020년의 자료는 2017년도의 자료임. 프랑스의 2020년의 자료는 2018년도의 자료임.
출처: “SF_3_1_Marriage_divorce_rates[데이터파일],” OECD, 2024, <https://web-archive.oecd.org/temp/2024-06-21/69263-database.htm>에서 2025.3.05. 인출함.

2. 출산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 프랑스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스웨덴과 독일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2000년 640,089명에서 2021년 260,562명으로 379,527명(59.3%) 감소하여 5개국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감소 폭뿐 아니라 감소율 측면에서도 가장 가파르며, 이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일본은 2000년 1,190,547명에서 2021년 811,622명으로 378,925명(31.8%) 줄어들어, 감소 폭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지만 감소율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2000년 773,395명에서 2021년 701,927명으로 71,468명(9.2%) 감소하여, 출생아 수가 감소한 국가들 중 가장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스웨덴은 2000년 88,173명에서 2021년 114,263명으로 26,090명(29.6%) 증가하였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0년 766,999명에서 2021년 795,492명으로 28,493명(3.7%) 증가하였다. 스웨덴과 독일의 출생아 수 증가는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 증가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가임여성 인구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민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전체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했다(남현주, 2023).

〈표 2-10〉 출생아 수 추이(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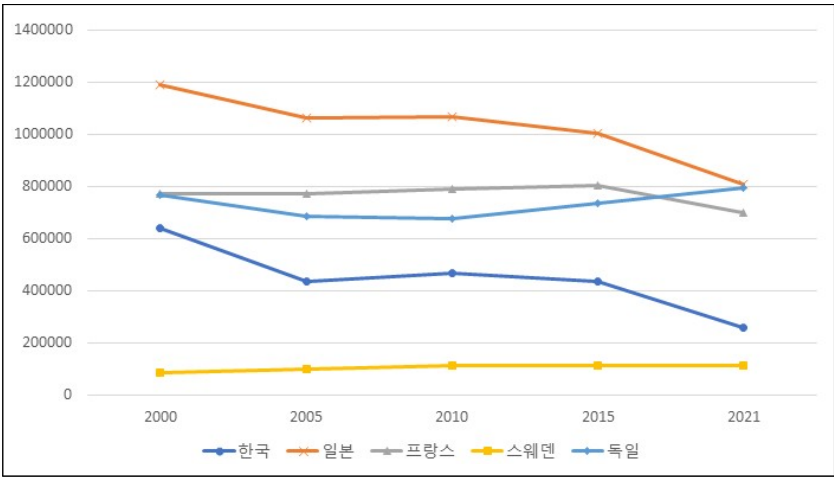
(단위: 명)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21	증감
한국	640,089	438,707	470,171	438,420	260,562	-379,527
일본	1,190,547	1,062,530	1,071,304	1,005,677	811,622	-378,925
프랑스	773,395	774,355	792,996	806,101	701,927	-71,468
스웨덴	88,173	101,341	115,641	114,870	114,263	26,090
독일	766,999	685,795	677,947	737,575	795,492	28,493

주: 2000년 스웨덴의 경우 1999년도로 대체함, 2010년의 프랑스의 경우 2011년 자료로 2015년 프랑스 자료는 2014년 자료로 대체함.
출처: “출생아 수 및 출생 성비[데이터파일],” 통계청,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6&conn_path=I3에서 2025.4.1. 인출함.

[그림 2-8] 출생아 수 추이(2000-2021)

(단위: 명)



주: 2000년 스웨덴의 경우 1999년도로 대체함, 2010년의 프랑스의 경우 2011년 자료로 2015년 프랑스 자료는 2014년 자료로 대체함.
출처: “출생아 수 및 출생 성비[데이터파일],” 통계청,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6&conn_path=I3에서 2025.4.1. 인출함.

1970년부터 2021년까지의 분석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5개국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며, 그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출산 현상이 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은 절대적 수치로도 낮지만, 분석 기간의 감소 폭(3.72명)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70년 2.13명에서 2021년 1.30명으로 0.83명 하락하여, 5개국 중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1.3~1.5명 수준의 저출산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1970년 2.48명에서 2021년 1.80명으로 비교적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5개국 중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0년 당시 5개국 중 유일하게 2.0명 미만이었으며,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2021년에는 1.67명을 기록하였다. 독일은 1970년 2.03명에서 2021년 1.58명으로 0.45명 감소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결혼과 출산 간의 연관성이 매우 강한 사회로, 혼인율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직결된다. 초혼연령 상승 역시 출산율 하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결혼과 출산이 강하게 연결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결혼 지연이 곧 출산 지연 및 포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스웨덴은 높은 초혼연령(남 36.2세, 여 33.6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의 관계가 약화되고, 혼외출산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 가족 지원 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결혼 형태와 무관하게 아동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높은 초혼연령이 출산율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였다(인구정책연구실, 2018).

〈표 2-11〉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1)

(단위: 명)

국가명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1	증감
한국	4.53	2.82	1.57	1.48	1.09	1.23	1.24	0.81	-3.72
일본	2.13	1.75	1.54	1.36	1.26	1.39	1.45	1.30	-0.83
프랑스	2.48	1.95	1.78	1.87	1.92	2.02	1.93	1.80	-0.68
스웨덴	1.94	1.68	2.14	1.55	1.77	1.98	1.85	1.67	-0.27
독일	2.03	1.56	1.45	1.38	1.34	1.39	1.50	1.58	-0.45

출처: “SF_2_1_Fertility rates[데이터파일],” OECD, 2024, <https://web-archive.oecd.org/temp/2024-06-21/69263-database.htm>에서 2025.3.5. 인출함.

다음으로, 〈표 2-12〉에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출산 연령을 제시하였다. 5개국 모두에서 평균 출산 연령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상승 폭과 혼인과의 관계는 국가별로 상이했다.

한국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0년 29.0세에서 2021년 33.4세로 4.3세 상승하여, 5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의 초혼연령(30.8세)이 출산 연령(33.4세)보다 앞서는 ‘결혼 후 출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도 2000년 29.6세에서 2021년 32.2세로 2.6세 상승하였고, 여성 초혼연령(29.4세)이 출산 연령(32.2세)보다 낮아 한국과 유사하게 결혼이 출산에 선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유럽 국가들에서는 상이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프랑스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0년 29.3세에서 2021년 31.0세로 1.7세 상승하였으며, 2021년 기준 여성 초혼연령(33.1세)이 출산 연령(31.0세)보다 더 높았다. 같은 기간 스웨덴 역시 평균 출산 연령이 29.9세에서 31.5세로 상승하였고, 2021년 기준 여성 초혼연령(33.6세)은 이보다 높았다. 독일의 경우 2000년 28.8세에서 2021년 31.5세로 2.7세 상승하였으며, 이는

여성 초혼연령(31.2세)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요약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결혼 후 출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유럽 국가들에서는 결혼과 출산 사이에 명확한 선후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럽에서는 비혼 출산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문화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12〉 출산 시 모의 평균연령 추이(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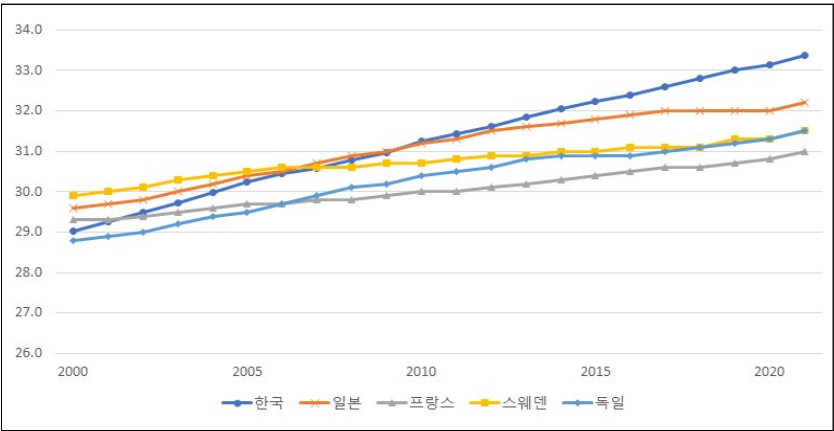
(단위: 세)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21	증감
한국	29.0	30.2	31.3	32.2	33.4	4.3
일본	29.6	30.4	31.2	31.8	32.2	2.6
프랑스	29.3	29.7	30.0	30.4	31.0	1.7
스웨덴	29.9	30.5	30.7	31.0	31.5	1.6
독일	28.8	29.5	30.4	30.9	31.5	2.7

출처: “SF_2_3_Age_mothers_childbirth[데이터파일],” OECD, 2024, <https://web-archive.oecd.org/temp/2024-06-21/69263-database.htm>에서 2025.3.5. 인출함.

〔그림 2-9〕 출산 시 모의 평균연령 추이(2000-2021)

(단위: 세)



출처: “SF_2_3_Age_mothers_childbirth[데이터파일],” OECD, 2024, <https://web-archive.oecd.org/temp/2024-06-21/69263-database.htm>에서 2025.3.5. 인출함.

제3절 사망

제3절에서는 사망에 관해 살펴본다. 한국의 조사망률은 2000년 5.2에서 2021년 6.2로 1.0 증가하였으나, 분석 기간에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다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조사망률이 2000년 7.6에서 2021년 11.5로 3.9 증가하여, 5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프랑스의 조사망률은 2000년 9.1에서 2021년 9.8로 0.7 증가하여 5개국 중 가장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스웨덴의 경우 2000년 10.5에서 2021년 8.9로 1.6 감소하여, 5개국 중 유일하게 조사망률이 감소하였다. 독일의 조사망률은 같은 기간 10.2에서 12.3으로 2.1 증가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독일의 조사망률이 5개국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독일의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망률의 추이는 각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2000년대 초반에는 고령화가 덜 진행된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유럽 국가들의 조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으나, 2021년에는 일본의 조사망률이 프랑스와 스웨덴을 넘어 독일에 근접한 수준이 되었다. 이는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결과이다.

한국의 조사망률은 2021년 기준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향후 일본과 유사하게 조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표 2-13〉 조사망률 추이(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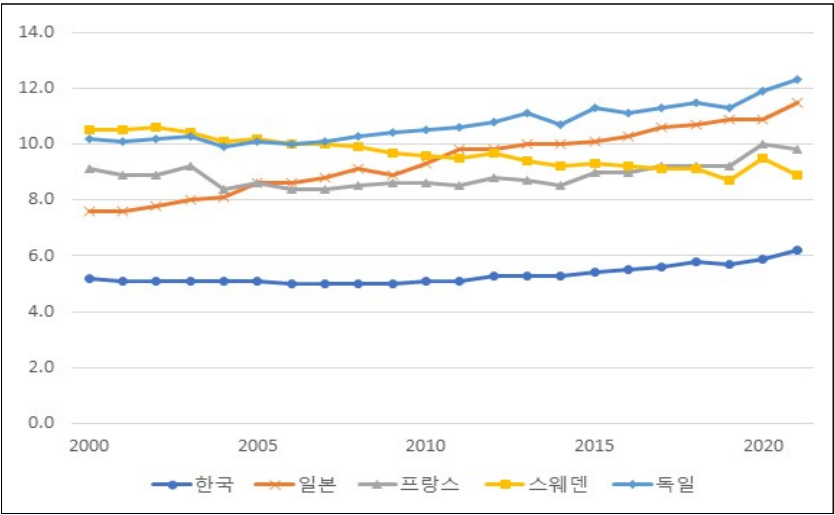
(단위: 천 명당 명)

국가명	2000	2001	2005	2010	2015	2021	증감
한국	5.2	5.1	5.1	5.4	5.9	6.2	1.0
일본	7.6	8.6	9.3	10.1	10.9	11.5	3.9
프랑스	9.1	8.6	8.6	9.0	10.0	9.8	0.7
스웨덴	10.5	10.2	9.6	9.3	9.5	8.9	-1.6
독일	10.2	10.1	10.5	11.3	11.9	12.3	2.1

주: 조사망률은 특정 연간 총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1,000분배)
출처: “인구동태 및 밀도[데이터파일],” 통계청, 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5&conn_path=I3에서 2025.4.1. 인출함.

〔그림 2-10〕 조사망률 추이(2000-2021)

(단위: 천 명당 명)



주: 조사망률은 특정 연간 총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1,000분배)
출처: “인구동태 및 밀도[데이터파일],” 통계청, 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5&conn_path=I3에서 2025.4.1. 인출함.

마지막으로, 5개국의 기대여명 추이를 살펴본다. 모든 국가에서 기대여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속도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기대여명은 1970년 남성 58.5세, 여성 66.1세에서 2023년 남성 81.2세, 여성 87.2세로 높아졌다. 이는 남성이 22.7세, 여성이 21.1세 증가한 것으로, 5개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1970년 남성 69.3세, 여성 74.7세에서 2023년 남성 81.7세, 여성 87.7세로 남녀가 각각 12.4세, 13.0세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5개국 중 두 번째로 큰 수치이며, 2023년을 기준으로 남녀 모두 5개국 중 기대여명이 가장 높았다.

프랑스의 기대여명은 1970년 남성 68.4세, 여성 75.8세에서 2023년 남성 80.4세, 여성 86.1세로 높아져, 남성은 12.0세, 여성은 10.3세 증가하였다. 스웨덴은 1970년 남성 72.2세, 여성 77.2세에서 2023년 남성 81.4세, 여성 85.1세로 남녀가 각각 9.2세, 7.9세 증가했다. 이는 5개국 중 유일하게 한 자릿수의 증가 폭이지만, 1970년을 기준으로 이미 스웨덴의 기대여명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독일은 1970년 남성 67.5세, 여성 73.5세에서 2023년 남성 79.0세, 여성 83.8세로 남녀의 기대여명이 각각 11.5세, 10.3세 증가하였다. 이는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의 증가이지만, 2023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기대여명이 5개국 중 가장 낮았다.

〈표 2-14〉 기대여명 추이(1970-2023)

(단위: 세)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증감
한국	남성	58.5	60.5	66.8	72.3	74.8	77.1	79.0	80.3	81.2	22.7
	여성	66.1	69.7	75.4	80.1	82.0	84.2	85.8	86.8	87.2	21.1
일본	남성	69.3	73.4	75.9	77.7	78.5	79.5	80.7	81.6	81.7	12.4
	여성	74.7	78.8	81.9	84.5	85.4	86.2	87.0	87.7	87.7	13.0
프랑스	남성	68.4	70.2	72.7	75.2	76.7	78.0	79.0	79.2	80.4	12.0
	여성	75.8	78.4	81.0	82.8	83.8	84.7	85.2	85.1	86.1	10.3
스웨덴	남성	72.2	72.8	74.8	77.4	78.4	79.5	80.3	80.6	81.4	9.2
	여성	77.2	78.9	80.4	82.0	82.7	83.5	84.0	84.3	85.1	7.9
독일	남성	67.5	69.6	71.9	74.9	76.4	77.4	78.1	78.6	79.0	11.5
	여성	73.5	76.1	78.4	81.0	82.0	82.6	83.0	83.4	83.8	10.3

주: 기대여명은 추정치(Estimates) 자료
출처: “기대여명[데이터파일],” 통계청,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9&conn_path=I3에서 2025.4.1. 인출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

제1절 일본

제2절 프랑스

제3절 독일

제4절 스웨덴

제3장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

제1절 일본²⁾

1. 아동기본법 및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 어린이가정청

일본은 이전까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아동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동의 권리 및 삶의 질 보장을 위해 2022년 6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법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와 사회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에는 아동의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적절한 양육과 생활 보장,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자유로운 의견 표명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보장, 아동의 의견 존중과 최선의 이익 고려, 가정 중심의 양육 책임과 양육 환경 확보, 그리고 육아의 기쁨과 긍정적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이 포함된다.

또한,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2023년 6월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 변화, 모든 아동 및 양육 가구에 대한 끊임 없는 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바탕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구조적인 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개

2) 최경덕, 오신휘, 조성호, 김명중, 김원경, 황남희. (2024).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장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하였다.

혁, 고용안전망 강화, 지방 창생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육아 부담의 성별 편중을 개선하고, 기업과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는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유연한 근무형태의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 및 육아지원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끊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0~2세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지원의 지속성과 포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동 및 가족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4월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켰다. 어린이가정청은 어린이가정청 설치법과 아동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 관련 정책의 효율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가정청은 육아지원, 아동 학대 예방, 아동 권리 보호 등 아동 문제 전반을 다루며, 일본 내 아동 정책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주요 저출산 대책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 지원,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 임신·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아동수당은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3세 미만 아동에게는 첫째 또는 둘째일 경우 월 15,000엔, 셋째일 경우 월 30,000엔을, 3세 이상부터 고등학생에게는 첫째 또는 둘째에게 월 10,000엔, 셋째에게는 월 30,000엔을 지급한다. 출산·육아 일시금은 아동 1명당 50만 엔이 지급되며, 출산·육아 응원 교부금이 신설되어, 2026년부터는 임신 8~10주 시점에 5만 엔, 출생 신고 시 5

만 엔을 지급하여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고등교육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약 380만 엔을 넘어서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연 소득이 380~600만 엔인 3자녀 이상 가구 및 사립대학 진학 가구에 대해 등록금의 1/4을 새롭게 지원하며, 2025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가 국공립 및 사립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장학금 제도도 개편되어, 2024년부터는 대여형 장학금의 감액 반환 조건이 완화되었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재학 중 수업료 납부를 유예하는 후불제가 도입된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에는 개시 180일 동안은 급여의 67%가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8일 동안 휴직 전 임금의 13%를 추가로 지급해 총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2025년부터 육아 시 단축근무급여가 신설되어,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경우 단시간 근무 중 지급되는 임금의 10%를 지원받는다. 자녀 간호휴가는 사용 대상이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으로 확대되며 사용 사유도 다양화된다. 이 외에도 2028년부터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주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며,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대상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까지 포함되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된다.

한편,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동행형 상담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2025년부터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3세 미만 아동이 시간제로 보육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가 도입되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3. 주요 고령화 대책

고령자의 신체 능력이 향상되고, 취업이나 지역활동 등 사회참여에 대한 의욕이 높은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 정부는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지침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8년 발표 이후 6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고령사회대책대강이 2024년에 발표되었으며, 새로운 대강은 다음의 세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첫째, 연령에 상관없이 희망에 따라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경제사회를 구축한다. 둘째, 혼자 사는 고령자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다세대가 함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 셋째,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책을 꼼꼼히 전개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인지증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인지증 당사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인지증 환자가 존엄을 유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인지증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인지증기본법은 인지증 환자가 기본적 인권을 지닌 개인으로서, 자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 시책으로는 인지증 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인지증 환자 생활의 장애물 제거 및 환경 개선, 인지증 환자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확대 등이 있다.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보험제도(2000년)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2012년)을 도입하였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개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며 이를 통해 안

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특히, 이용자가 서비스 종류와 사업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민간 및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 다양성을 확대하였다. 처음에는 고령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을 10%로 설정하였으나, 재정 문제로 인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20~30%까지 인상하였다. 제9기 개호보험사업계획(2024~2026년)은 개호서비스 기반 정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고도화, 개호인력 확보 등을 목표로 하며, 보험료 인상이 수반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중증 요개호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 호조(互助)’의 개념을 기반으로, 시정촌이나 도도부현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행정기관, 민간기관, 의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협력하여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 의료비 및 개호비용 등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각 지역사회에 맞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자율성이 오히려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민관 협력 방식 등 선진사례를 통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제2절 프랑스³⁾

1. 소득·주거 지원 정책

프랑스에서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을 줄이고, 주거 지원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며, 취약 계층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소외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20여 종의 현금 수당을 가족의 여건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그중 출생 보너스는 출생과 입양에 대한 수당을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 수당이다. 이 수당은 자녀 출산에 앞서 재정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임신 7개월 차에 지급되며, 금액은 2024년 4월 1일부터 자녀당 1,066.31 유로이다. 지원 대상은 일정 자산 이하의 자녀 출산 및 입양 예정 부부 또는 한부모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은 첫째 자녀는 34,791유로 이하, 둘째 자녀는 소득이 41,749유로 이하, 셋째 자녀는 소득이 50,099 유로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⁴⁾ 한부모 또는 외벌이 가구는 소득 상한선이 맞벌이 가구보다 높다.

기초수당은 3세 미만의 자녀 또는 20세 미만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6개월간 매월 96.65유로 또는 193.31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은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기준으로 1년 중 6개월 이상 프랑스에 거주해야 한다. 둘째 자녀를 출산한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되며, 금액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 자녀 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

3) 이소영, 최인선, 이지혜, 손동기, 김영아. (2024).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3장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하였다.

4) 넷째 자녀부터는 50,099유로에 자녀 1명당 8,350유로씩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7.13~148.52유로가 지급되며, 자녀가 14세가 되면 기본 지원 금액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18.57~74.26유로가 더해진다. 15세와 16세의 자녀가 2명 있는 경우에는 15세인 자녀에 대해서만 추가로 수당이 지급된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지원 금액이 커지며,⁵⁾ 자녀가 20세가 되면 가족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일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일정 조건이 성립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시정액수당이 지급된다.

일일 부모동반수당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심각하게 아프거나 부상을 입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와 함께 보낸 하루(64.54유로) 또는 반나절(32.27유로)에 대해 월 최대 22일까지 최대 3년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 수당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서 3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를 최소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족보충수당,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족지원수당, 자녀 양육을 위해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공동양육수당, 학년이 시작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 등에 지급하는 신학기수당, 20세 미만의 자녀가 장애인 권리 및 자율성 위원회에서 인정한 장애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장애아동양육수당, 만 24세 이하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자녀사망수당 등이 있다.

주거 지원은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 가족주거수당, 사회주택수당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은 세입자 또는 하위 세입

5) 자녀가 3명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84.71~338.81유로가 지급된다.

자가 가족수당기금 일반체제를 통해 임대료 보조금을 받게 된다. 임대하는 지역과 가구원의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게 되며,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지원액이 감소한다. 가족주거수당은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결혼한 지 5년 미만이거나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회주택수당은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과 가족주거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학생, 젊은 세대, 자녀가 없는 가구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대상이다.

2. 양육·보육 지원 정책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출산휴가는 출산 전(산전휴가)과 출산 후(산후휴가)를 포함한다.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자동으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 기간은 자녀의 출생 순위, 다태아 여부에 따라 다르다. 단태아의 경우 첫째~둘째 자녀는 산전휴가 6주, 산후휴가 10주로 총 16주의 휴가 기간이 주어지며, 셋째 이상 자녀는 산전휴가 8주, 산후휴가 18주로 총 26주의 휴가 기간이 주어진다. 출산휴가의 일부를 포기할 수는 있으나 출산 후 6주를 포함하여 최소 8주 동안은 일을 중단해야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경우 출산휴가 동안 기본 급여와 보너스가 전액 지급된다, 민간부문 종사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기본기금에서 일일 출산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급액은 업무 중단일 이전에 받은 마지막 3개월 치 급여의 합계를 91.25의 계수로 나눈 금액이다.

민간부문 종사자인 자녀의 아버지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 수습 중이거나 정규직인 경우 또는 파견 중인 자녀의 아버지도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자녀돌

보휴가 기간은 25일인데(다태아의 경우 32일), 이 중 배우자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4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남은 21일(다태아의 경우 28일)의 자녀돌봄휴가는 두 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각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자녀돌봄휴가 기간에 기본 급여와 보너스가 전액 지급되며, 민간부문 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기본기금에서 일일 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급액은 업무 중단일 이전에 받은 마지막 3개월 치 급여의 합계를 91.25의 계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음으로 입양휴가를 살펴본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은 입양되는 자녀 수, 기존 부양 자녀 수, 부모가 휴가를 공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입양 자녀 수가 1명이면서 출생 자녀 수가 0~1명인 경우 부모 중 한 사람만 사용 시 16주의 기간이 부여되며, 부모 2명이 공유하는 경우 16주+25일의 기간이 부여된다. 입양휴가는 최대 2개의 기간으로 분할이 가능하며, 한 기간은 최소 25일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를 위해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제도로, 민간부문의 직장인, 자영업자와 공무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만 3세 생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어린이집 입학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의 여섯 번째 생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육아휴직은 최초에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2~6개월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은 무급 휴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와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구분한 보육·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3세 미만의 영아는 크레쉬(Crèche) 중심의 집단 보육 서비스와 아

이돌보미, 재가보육사 등의 개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3~5세는 대부분 교육 중심의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에서 공교육 서비스를 받는다. 집단 어린이집(Crèche collective)은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집의 형태로 생후 만 2개월~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종일제 정규보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이다. 주로 영유아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최대 60명까지 입소할 수 있고, 한 개의 교실에서 최대 15명까지 수용하고 있다. 이외의 집단 보육시설로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고, 개별 보육으로는 아이돌보미, 재가보육사 등이 보육·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 그 외 정책

프랑스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한다. 임신 시작부터 출산 후 12일까지의 모든 검사가 건강보험에 의해 지원되며, 임신 5개월 전까지 실시한 2회의 초음파 검사는 70%, 이후 시행되는 3차 초음파 검사는 100% 지원된다. 또한, 20세 전후 모든 사람에게 불임 검사가 지원되며, 인공수정은 최대 6회, 시험관 시술은 최대 4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노인 개인별 자립수당이 있다. 이는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은퇴 이후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령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23년 개혁에 따라 법정 은퇴 연령은 64세에 이르게 될 예정이며,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42년에서 43년으로, 최소 연금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인상된다.

제3절 독일⁶⁾

1. 수당 제도

소득세법과 연방아동수당법에 근거한 독일의 아동수당은 독일에 거주하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는 소득이나 실제 납부 세금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지급되지만, 부모나 주 양육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아동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18세까지이며,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월 250유로씩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 수급자 수와 지출액은 2000년 1,482.7만 명, 256.27억 유로에서 2022년 1,719.5만 명, 479.2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아동수당보조금은 저소득 아동가구에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빈곤을 해소하고 소득이 낮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982년에 도입되었다. 부모가 자신들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은 있으나 전체 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충족할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 아동수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을 기준으로 아동 1명당 월 292유로가 지급된다. 한편, 아동빈곤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독일 정부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이 빈곤으로 인해 교육, 건강, 사회적 활동 등에서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보장제도를 2025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아동수당, 아동수당보조금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6) 주보혜, 권영지, 김유휘, 박은정, 김은정. (2024).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3장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하였다.

제공될 예정이다.

부모수당은 부모가 자녀돌봄으로 인해 소득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에 시행되었다. 기본부모수당, 부모수당플러스, 파트너십보너스로 크게 구분되며, 부모가 3가지 부모수당 형태를 혼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별로 부모가 급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부모수당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독일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부모 중 한 명이 사용할 때는 자녀 생후 12개월, 두 명 모두 사용할 때는 자녀 생후 1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모수당플러스는 출산 후 시간제 근로(주당 최대 32시간 근무) 시 지급되며, 파트너십보너스를 2~4개월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주당 24~32시간 근무하며 동시에 부모수당플러스를 사용해야 한다. 부모수당 지급액은 부모수당의 종류, 지급 전 소득, 부모수당 지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부모수당의 하한액은 월 300유로이며, 상한액은 월 1,800유로이며, 부모수당플러스의 지급액은 기본부모수당의 50%이다.

2. 돌봄 정책

독일의 최근 영유아 돌봄은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보육시설 및 아동주간돌봄의 질 및 참여 개선을 위한 법」이 2018~2019년에 걸쳐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질 개선을 위해 교사 고용을 늘리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 및 시설 환경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었다. 둘째, 어린이집 이용료를 낮추고 저소득이나 다자녀 가구에게 보육료를 면제해 주는 등 연방 전체에서 부모의 보육

로 부담이 경감되었다. 셋째, 모든 아동이 출신 배경이나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이후 2023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질 개선법」이 발표되었다.

초등 돌봄에 관하여 살펴보면, 독일 연방정부는 2003~2009년에 미래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에 4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독일 연방 전체에 전일제 학교 도입 및 확대를 장려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사업으로 2004~2015년까지 ‘더 많은 아이디어! 종일 학습’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아동의 사회적 돌봄 강화가 강조되면서 전일제 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연정협약서에 명시되었으며, 2017년 협약에서는 초등 학령기 아동을 위한 종일 돌봄 청구권 도입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 자녀의 전일제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는 2026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3. 지역 균형발전 정책

균형 잡힌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이하 GRW)’의 법적 토대인 GRW법이 마련되었다. GRW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받는 불이익을 조정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GRW는 연방정부와 연방 주가 각각 지출의 절반을 부담하며,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원 수단 중 하나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GRW 정책은 시기마다 변화를 거쳤으며, 독일 정부 지역정책의 방향성이 GRW 운용에 반영되어 있다.

2022년 12월,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대규모의 GRW 개혁을 채택했

데,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 경제적 인프라 확장에 주력했던 기존의 정책에서 정책의 범위와 과제가 크게 확장되었다. 해당 GRW 개편을 통해 연방정부는 기후보호 및 지속가능성 제고, 생활필수서비스,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좋은 근로 강화 등 경제 외적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GRW를 포함하는 독일의 지역정책은 ‘생활 조건의 동등성’⁷⁾이라는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생활 조건의 동등성은 과거에 비해 현대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독일 정부의 이해는 “지역적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독일의 모든 사람이 좋은 삶, 좋은 기본 서비스, 좋은 일자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 조건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목표는 과거 공간계획 정책 차원에서 고려되었지만, 점차 의미가 확장되어 이제는 생활서비스는 물론 지역 내 사회적, 경제적 격차, 서로 다른 발전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4. 이민정책

독일에서는 1950년대부터 1973년까지 전후 경제 재건과 경제 호황이라는 배경 속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간 협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인력을 모집하고 독일로 입국시키는 방식인 초청이민자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시켰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독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모집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며, 1980년대 초에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망명 신청자의 증가, 이민 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이민에 대한 대중들의 방어적인 태도

7) 동등한 생활 조건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7월에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농촌과 도시 지역을 지속 가능하며 매력적이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고 살기 좋으며 인구학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안들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가 강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이주를 억제하고 국경을 강화하는 방어적인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관련 법제도의 발전과 함께 이민의 점진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새로운 이민법을 발표하였고, 2012년에 유럽연합에서 높은 숙련 수준의 제3국 출신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블루 카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독일도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숙련인력이민법을 시행하여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외국인 숙련 인력들이 독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22년에는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숙련인력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3년 6월에는 숙련인력이민법을 보완하는 숙련인력이민의 추가 개발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외국인의 고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4절 스웨덴⁸⁾

1. 노동시장 정책

대표적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이 빈곤에 처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은 관대한 급여 수준과 자격 요건을 특징으로 하는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국가가 운용

8) 신영규, 조성호, 변영환, 남윤재, 김우성. (2024).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장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하였다.

하는 기초실업보험으로, 고용 상태에 있는 모든 노동자는 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민간 조직인 실업보험기금이 운용하는 실업보험으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소득연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실업보험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실업자는 소득연계실업급여를 받고, 그렇지 않은 실업자는 기초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다. 또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했더라도 소득연계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는 기초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스웨덴의 실업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65세까지 지급된다. 65세가 되기 전 고용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구하면 매일 3시간 이상, 주당 평균 17시간 이상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스웨덴 공공고용서비스센터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노동시장에 참여 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한, 실업에 처하기 전에 실직일 직전 12개월 중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거나 실직일 직전 12개월 중 6개월 동안 연속으로 420시간 이상 근무하고 각 달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300일 동안 지급되며, 실업자에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150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연장된다. 소득연계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직 전 소득의 80%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한액은 세전 월 26,400크로나이다. 기초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업 전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 기준 최대 세전 월 11,220크로나가 지급된다.

스웨덴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하고 활발히 활용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스웨덴의 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⁹⁾ 특히 현재는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 촉진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그들의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 이민자를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2. 이민자 정책

스웨덴의 이민 인구는 1970년까지 전체 인구의 6.7%에 머물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으로 본인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모두가 외국 출신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민정책은 신규 이민에 대한 정책과 이미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신규 이민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1930~1945년에는 나치의 박해와 2차 대전으로 스웨덴 주변 국가들에서 발생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난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1945~1970년에는 전후 경제호황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이민을 자율화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이었고, 1970~1994년에는 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지면서 노동 이민을 억제하게 되지만, 난민과 가족 이민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유지하였다.

1995년 유럽연합 가입을 계기로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유럽연합과 통합되어,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이민자들은 스웨덴의 노동시장과 사회

9) 202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평균 공적 지출 규모는 GDP 대비 0.426%이지만, 스웨덴은 0.988%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스웨덴인들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받게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 이후 스웨덴의 노동 이민 정책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노동 이민을 촉진하고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유럽 출신 노동 이민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일어나지 않았다.

난민정책은 난민의 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난민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해지고, 친족에 대해서 허용되었던 가족 이민의 대상이 직계 가족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특히 2015년 대규모 시리아 난민의 유입을 계기로 하여 2016년과 2021년에는 난민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가족 이민을 신청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이민자 정책은 다문화화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스웨덴 사회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3. 가족정책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위한 재정 공공지출 규모가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OECD 회원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스웨덴이 GDP 대비 3.4% 규모의 재정을 가족정책에 투입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가족을 위한 다양한 수당은 스웨덴 사회보험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청은 휴직급여, 아동수당, 장애아동지원수당, 주택수당 등을 제공한다.

스웨덴에서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최대 480일 동안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같은 가구에 살 경우 부모에게 각각 240일의 육아휴직이 배정되고, 한 명의 부모가 혼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만 480일이 배정된다. 240일 중 195일은 임금에 비례한 육아수당이

지급되며, 45일은 최저 금액이 지급된다.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16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 각각에 대해 아동수당을 받게 되며, 한 가정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로 대가족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급여액은 자녀 1인당 월 1,250크로나이며, 대가족보조금은 자녀가 많아질수록 커져 16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정에는 월 150크로나, 6명인 가정에는 월 4,240크로나가 지급된다.

스웨덴에서는 자녀가 1세가 되기 이전에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것을 권장하여,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1세가 되어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웨덴의 유치원은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와 함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가정이 지불하는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가구 소득,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이용 자녀의 수, 지방정부의 보조금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 외에 스웨덴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로는 재가서비스, 시설돌봄서비스, 교통서비스 등이 있다.



제4장

한국 및 해외 4개국의 결혼·출산·육아 인식 비교

제1절 인식 조사 개요

제2절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3절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제4절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제5절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및 해외 4개국의 결혼·출산·육아 인식 비교

제4장은 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5개국(한국 및 해외 4개국)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이 장의 제2절~제5절에서는 순서대로 5개국의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제1절 인식 조사 개요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¹⁰⁾는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4년에 실시한 조사로, 각국에서 2,500명씩 총 1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동 조사는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4개국 인구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본은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 방식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 특성,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며, 영역별 세부 내용은 <표 4-1>에 제시하였다.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제2024-030호에 의해 IRB 승인을 받았다.

〈표 4-1〉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영역별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지역 - 학력 - 동거중인 파트너, 애인, 배우자 유무 - 혼인상태 - 자녀 유무, 자녀 수 - 가구원 수 - 경제활동상태 - 가구소득, 경제적 생활 수준 인식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의향 - 출산 의향 및 계획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 가족계획(출산) 시 고려 요인 -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 일과 가사, 육아에 대한 성역할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적절한) 가사분담 비율 - (실제/적절한) 육아분담 비율 -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 돌봄의 주체에 관한 견해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변화에 관한 인식 - 성공을 위한 요인 및 불평등에 관한 인식 - (부모세대/응답자세대/자녀세대)생활 수준 비교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 일·가정 양립 정책 활용 가능성 -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5개국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표 4-2>에 제시하였다. 5개국 전체적으로 남성의 비율(51.0%)이 여성의 비율(49.0%)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30.1%), 30대(34.1%), 40대(35.8%)로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그중 4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거 중인 파트너, 애인 또는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2%,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1%였으며,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8.8%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생활 수준¹¹⁾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 부족하지 않게

11)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 월 소득 대신 경제적 생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각 국가 간 화폐 단위가 다른 점 등 직접적인 소득 비교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생활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0%로 가장 높았고, 생활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7.8%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2〉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성별	남성	51.6 (1,291)	51.1 (1,278)	49.6 (1,240)	51.2 (1,280)	51.5 (1,288)	51.0 (6,377)
	여성	48.4 (1,209)	48.9 (1,222)	50.4 (1,260)	48.8 (1,220)	48.5 (1,212)	49.0 (6,123)
연령	20대(20~29세)	29.8 (744)	28.2 (704)	31.2 (779)	30.9 (772)	30.5 (763)	30.1 (3,762)
	30대(30~39세)	32.2 (804)	31.3 (783)	33.8 (846)	35.9 (897)	37.2 (930)	34.1 (4,260)
	40대(40~49세)	38.1 (952)	40.5 (1,013)	35.0 (875)	33.2 (831)	32.3 (807)	35.8 (4,478)
동거 파트너, 애인, 배우자 유무	있음	57.2 (1,430)	53.8 (1,345)	62.1 (1,552)	67.7 (1,692)	60.2 (1,505)	60.2 (7,524)
	없음	42.8 (1,070)	46.2 (1,155)	37.9 (948)	32.3 (808)	39.8 (995)	39.8 (4,976)
자녀 유무	있음	36.3 (907)	43.0 (1,074)	52.2 (1,305)	48.2 (1,205)	51.0 (1,276)	46.1 (5,767)
	없음	63.7 (1,593)	57.0 (1,426)	47.8 (1,195)	51.8 (1,295)	49.0 (1,224)	53.9 (6,733)
근로 여부	취업	76.8 (1,920)	77.0 (1,925)	81.4 (2,035)	81.3 (2,033)	77.6 (1,940)	78.8 (9,853)
	미취업	23.2 (580)	23.0 (575)	18.6 (465)	18.7 (467)	22.4 (560)	21.2 (2,647)
경제적 생활 수준 인식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음	8.6 (214)	10.1 (253)	21.6 (539)	24.4 (610)	10.6 (266)	15.1 (1,882)
	부족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음	54.9 (1,372)	48.4 (1,211)	41.3 (1,033)	39.0 (976)	41.4 (1,036)	45.0 (5,628)
	생활하기 어려움	28.8 (721)	22.2 (556)	26.3 (658)	27.0 (674)	34.4 (861)	27.8 (3,470)
	생활하기 매우 어려움	5.0 (124)	8.4 (211)	8.4 (210)	7.0 (176)	11.1 (277)	8.0 (998)
	모르겠음	2.8 (69)	10.8 (269)	2.4 (60)	2.6 (64)	2.4 (60)	4.2 (522)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제2절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2절에서는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표 4-3〉에서는 현재 동거 중인 파트너, 애인 또는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인 응답자들¹²⁾을 제외한 후 결혼 의향을 살펴보았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52.9%)에서 가장 높고, 일본(32.0%)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프랑스에서 35.5%로 가장 높았다. 다만, 5개국 모두에서 생각해본 적 없다 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들의 향후 선택에 따라 국가별 결혼 의향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표 4-3〉을 해석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일본을 제외한 4개국에서 남성의 결혼 의향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남녀 간 결혼 의향 차이가 가장 뚜렷했는데,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에 비해 10%p 이상 높게 나타난 유일한 국가였다. 또한, 5개국 모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함께 사는 파트너, 애인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취업상태인 경우, 경제적 생활 수준이 여유롭다고 인식하는 경우(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음 + 부족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음)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귀하는 현재 함께 사는 파트너, 애인, 배우자가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하고, 이어지는 '귀하는 현재 함께 사는 파트너, 애인, 배우자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법률혼'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의미한다.

〈표 4-3〉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결혼할 생각이 있다	52.9	32.0	38.2	46.5	50.2	44.0
결혼할 생각이 없다	24.2	25.2	35.5	25.8	19.6	26.1
생각해본 적 없다	5.4	15.4	9.5	15.5	6.5	10.5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17.6	27.4	16.8	12.2	23.7	19.4
계	100.0 (1,383)	100.0 (1,492)	100.0 (1,771)	100.0 (1,777)	100.0 (1,884)	100.0 (8,307)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4〉 응답자 특성별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성별	남성	58.3	30.7	41.3	47.9	52.5	45.9
	여성	46.9	33.7	35.2	44.9	47.8	41.9
연령	20대	59.6	43.6	57.8	63.3	71.2	59.5
	30대	53.1	31.9	34.0	43.9	48.3	42.6
	40대	33.3	17.5	17.2	26.2	24.2	22.6
동거 파트너, 애인, 배우자 유무	있음	76.0	48.7	46.7	54.6	60.6	55.7
	없음	46.1	27.1	30.9	36.8	40.9	36.2
자녀 유무	있음	19.4	28.8	35.4	46.3	45.5	40.7
	없음	53.8	32.6	40.0	46.6	53.4	45.3
근로 여부	취업	54.9	34.3	38.9	47.7	52.1	45.4
	미취업	47.5	23.6	35.6	41.8	44.7	39.3
경제적 생활 수준 인식	여유로움	56.7	38.9	42.4	52.1	54.7	49.2
	어려움	46.8	26.9	32.2	38.2	46.2	38.6
계		100.0 (1,383)	100.0 (1,492)	100.0 (1,771)	100.0 (1,777)	100.0 (1,884)	100.0 (8,307)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다음으로는 5개국 응답자들의 향후 출산 의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스웨덴, 프랑스, 독일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과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20.3%에 그쳤다.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일본, 프랑스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독일과 스웨덴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¹³⁾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표 4-4>와 유사하게 일본을 제외한 4개국에서 남성의 출산 의향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 특히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향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5개국 모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는 경우, 경제적 생활 수준이 여유롭다고 인식하는 경우 향후 출산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 의향 모두에서 한국은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출산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3) 다만, <표 4-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개국 모두에서 생각해본 적 없다 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표 4-5>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표 4-5〉 향후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낳을 생각이다	31.2	20.3	38.8	38.6	43.2	34.4
낳지 않을 생각이다	47.3	45.9	46.7	39.7	39.6	43.8
생각해본 적 없다	5.9	11.4	5.0	8.9	3.0	6.9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15.6	22.4	9.5	12.8	14.3	14.9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6〉 응답자 특성별 향후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성별	남성	37.8	18.5	42.9	42.3	46.0	37.5
	여성	24.2	22.1	34.8	34.8	40.1	31.2
연령	20대	46.4	38.5	64.8	62.1	73.0	57.3
	30대	39.8	23.2	40.7	41.0	42.9	37.9
	40대	12.1	5.3	13.8	14.3	15.2	11.9
동거 파트너, 애인, 배우자 유무	있음	28.7	24.2	39.8	39.8	43.1	35.6
	없음	34.6	15.7	37.1	36.3	43.2	32.7
자녀 유무	있음	15.1	18.3	30.9	35.9	31.4	27.2
	없음	40.4	21.7	47.5	41.2	55.5	40.6
근로 여부	취업	31.3	21.2	39.3	39.8	44.2	35.3
	미취업	30.9	17.2	36.8	33.6	39.5	31.2
경제적 생활 수준 인식	여유로움	35.1	23.7	42.9	43.1	47.9	38.4
	어려움	24.4	17.3	32.1	31.2	37.9	29.4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7〉에는 향후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를 제시하였다.¹⁴⁾ 평균 계획 자녀 수는 독일과 스웨덴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2.11명), 일본(1.96명), 한국(1.74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개국의 최근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으로 한국 0.72명, 일본 1.20명, 프랑스 1.64명, 독일 1.35명, 스웨덴 1.45명)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¹⁵⁾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응답자들 중 일정 비율은 4명 또는 5명 이상을 계획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평균 계획 자녀 수가 2명 이하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동 비율이 각각 0.6%, 1.4%에 머물렀다.

한편,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계획 자녀 수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20대 2.25명, 30대 2.04명, 40대 1.97명 등으로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7〉 계획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1명	34.6	23.7	21.9	12.3	8.7	18.9
2명	57.8	57.8	51.6	53.7	55.9	55.0
3명	6.9	17.2	20.7	24.1	28.7	20.6
4명	0.6	1.4	5.2	6.2	5.4	4.2
5명 이상	0.0	0.0	0.7	3.6	1.3	1.3
평균(명)	1.74 (780)	1.96 (507)	2.11 (970)	2.35 (966)	2.35 (1,079)	2.14 (4,302)

주: 1) 각 항목(1~6명)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 평균 값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다음으로는 응답자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를 살펴보았다.

〈표 4-8〉에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

14)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응답이 0명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15) 실제로, 5개국의 합계출산율과 계획 자녀 수 간 상관계수는 0.76으로 나타났다.

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였다. 평균 이상적 자녀 수는 스웨덴(2.25명), 독일(1.99명), 프랑스(1.95명)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한국(1.58명)과 일본(1.53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표 4-7>의 평균 계획 자녀 수와 유사하다.

한편, 5개국 모두에서 이상적 자녀 수가 계획 자녀 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 4-7>에서 자녀를 낳을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계획 자녀 수를 0명으로 간주할 경우, 5개국 모두에서 계획 자녀 수는 이상적 자녀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계획 자녀 수가 이상적 자녀 수보다 적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는 경제적 부담이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현실적 제약이 출산 계획뿐 아니라 실제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표 4-7>에서 한국과 일본의 계획 자녀 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고, <표 4-8>에서 이상적 자녀 수조차도 낮게 나타난 것은, 양국에서 경제적 제약이나 육아 여건에 대한 우려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8> 이상적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0명	14.7	23.0	12.0	6.2	5.8	12.3
1명	18.9	14.6	11.6	11.5	8.2	13.0
2명	60.0	49.5	52.9	64.6	55.5	56.5
3명	5.8	12.2	18.4	13.6	22.0	14.4
4명	0.5	0.5	4.0	3.0	5.8	2.7
5명 이상	0.0	0.2	1.2	1.0	2.7	1.0
평균(명)	1.58 (2,500)	1.53 (2,500)	1.95 (2,500)	1.99 (2,500)	2.25 (2,500)	1.86 (12,500)

주: 1) 각 항목(1~6명)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 평균 값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9〉에는 가족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의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먼저, 〈표 4-9〉에 제시된 총 11개의 요인을 국가별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중요¹⁶⁾(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으며, 11개 요인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은 한국에서 가장 높았다. 각 요인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은 한국에서 87.2%로 나타났다. 프랑스(75.8%), 독일(75.0%), 스웨덴(74.3%)이 유사하였고, 일본은 68.2%로 가장 낮았다.

가장 중요시하는 3개 요인을 국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건강(95.4%), 본인의 건강(95.3%), 가정의 경제적 여건(94.3%)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본인의 건강(81.4%), 배우자의 건강(80.9%), 가정의 경제적 여건(77.8%), 프랑스에서는 본인의 건강(87.4%), 배우자의 건강(87.3%), 주거 여건(87.1%)을 중요하게 여겼다. 독일에서는 본인의 건강(88.1%), 배우자의 건강(87.8%), 주거 여건(83.0%), 마지막으로 스웨덴에서는 본인의 건강(88.0%), 배우자의 건강(87.7%), 가정의 경제적 여건(83.8%)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5개국 모두 예외 없이 〈표 4-9〉에 제시된 11개 요인 중 가정의 경제적 여건, 본인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 주거 여건 중 3개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서는 11개 요인들 중 경력 단절의 가능성을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16) 〈표 4-9〉에 대한 기술 중 '중요하다'는 표현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을 의미한다.

〈표 4-9〉 가족계획 시 고려 요인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가정의 경제적 여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0.1	3.6	4.7	4.6	2.9	3.2
	중요하지 않다	0.6	2.5	3.3	3.0	2.8	2.5
	보통이다	5.0	16.0	10.3	9.5	12.1	10.6
	중요하다	31.8	33.0	37.2	43.9	45.6	38.3
	매우 중요하다	62.5	44.8	44.5	38.9	36.6	45.5
본인의 건강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1.9	1.5	2.7	1.1	1.5
	중요하지 않다	0.2	1.6	2.6	2.4	2.0	1.7
	보통이다	4.5	15.1	8.5	6.8	9.2	8.8
	중요하다	35.8	36.0	34.0	34.1	43.4	36.7
	매우 중요하다	59.5	45.4	53.4	54.0	44.4	51.3
배우자의 건강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1.8	1.8	3.0	1.3	1.6
	중요하지 않다	0.2	1.7	1.8	1.8	2.1	1.5
	보통이다	4.4	15.6	9.1	7.4	9.2	9.2
	중요하다	35.0	33.8	32.5	34.1	40.2	35.1
	매우 중요하다	60.4	47.1	54.8	53.7	47.1	52.6
본인의 취업 상태	전혀 중요하지 않다	0.2	1.7	1.7	1.9	1.9	1.5
	중요하지 않다	1.4	3.6	2.4	3.5	3.5	2.9
	보통이다	11.0	24.5	13.8	16.6	17.0	16.6
	중요하다	35.9	36.2	43.3	47.7	42.9	41.2
	매우 중요하다	51.6	34.0	38.8	30.3	34.7	37.9
배우자의 취업 상태	전혀 중요하지 않다	0.7	2.5	2.1	2.3	2.1	1.9
	중요하지 않다	2.7	4.0	3.2	3.9	3.9	3.5
	보통이다	16.1	27.2	15.8	19.7	19.3	19.6
	중요하다	32.6	29.8	42.8	44.0	42.6	38.4
	매우 중요하다	47.8	36.6	36.2	30.1	32.1	36.6
주거 여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0.1	1.8	1.7	2.1	1.2	1.4
	중요하지 않다	0.3	4.4	1.9	3.1	2.6	2.5
	보통이다	9.2	36.5	9.4	11.8	11.8	15.7
	중요하다	43.8	39.4	42.4	43.6	45.3	42.9
	매우 중요하다	46.6	17.9	44.7	39.4	39.2	37.5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일·생활 균형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1.6	1.4	2.6	1.2	1.4
	중요하지 않다	0.9	1.9	2.5	5.0	2.5	2.6
	보통이다	9.4	21.7	12.7	23.0	12.6	15.9
	중요하다	42.7	44.4	38.1	38.0	41.6	41.0
	매우 중요하다	46.9	30.4	45.3	31.4	42.1	39.2
경력 단절의 가능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0.7	4.8	3.8	3.6	4.3	3.4
	중요하지 않다	3.7	10.8	8.8	8.2	10.6	8.4
	보통이다	23.3	44.5	29.6	31.0	36.6	33.1
	중요하다	41.8	27.0	36.0	35.3	32.6	34.5
	매우 중요하다	30.4	12.5	21.8	22.0	16.0	20.5
보육· 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0.3	2.3	4.4	3.4	2.3	2.5
	중요하지 않다	1.8	3.2	6.0	3.9	4.1	3.8
	보통이다	14.6	29.3	24.0	15.6	18.8	20.4
	중요하다	45.0	41.3	39.5	37.6	41.9	41.1
	매우 중요하다	38.3	23.9	26.2	39.6	33.0	32.2
정부의 충분한 지원	전혀 중요하지 않다	0.4	1.7	5.7	3.8	3.0	2.9
	중요하지 않다	1.4	2.7	9.8	6.2	6.7	5.4
	보통이다	13.8	28.0	31.9	23.2	28.4	25.0
	중요하다	37.9	37.4	32.2	34.8	39.8	36.4
	매우 중요하다	46.6	30.2	20.5	32.0	22.1	30.3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0.2	1.7	2.6	3.8	4.2	2.5
	중요하지 않다	0.9	1.9	4.5	6.5	9.8	4.7
	보통이다	12.2	27.2	23.1	29.0	31.5	24.6
	중요하다	36.5	38.8	38.6	33.6	32.1	35.9
	매우 중요하다	50.1	30.5	31.2	27.1	22.5	32.3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10〉은 자녀를 갖는 것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표 4-10〉에 제시된 보기들 중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기는 자녀 출산의 긍정적 영향을,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보기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며,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긍정적 영향 중에서는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동의(동의한다+전적으로 동의한다)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 74.3%, 일본 57.5%, 프랑스 67.9%, 독일 62.7%, 스웨덴 64.9%). 반면, 부정적 영향 중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 92.7%, 일본 73.2%, 프랑스 75.5%, 독일 77.6%, 스웨덴 65.2%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응답자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해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개국 중 가장 높은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경우, 향후 출산율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10〉 자녀 출산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5	2.2	5.0	3.4	4.5	3.1
	동의하지 않는다	2.4	5.1	8.3	7.0	8.8	6.3
	보통이다	11.8	28.6	20.0	18.0	27.5	21.2
	동의한다	48.0	41.4	40.9	38.4	36.0	40.9
	전적으로 동의한다	37.4	22.6	25.9	33.2	23.2	28.5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	2.6	3.3	3.3	2.8	2.6
	동의하지 않는다	3.1	6.0	6.2	6.2	5.9	5.5
	보통이다	21.6	33.9	22.6	27.8	26.4	26.5
	동의한다	45.7	36.8	36.6	37.4	36.0	38.5
	전적으로 동의한다	28.6	20.7	31.3	25.3	28.9	27.0

78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3	5.5	6.6	3.5	7.0	5.0
	동의하지 않는다	10.8	14.4	15.8	10.5	17.2	13.7
	보통이다	24.9	42.5	32.8	26.1	38.2	32.9
	동의한다	39.5	28.3	29.2	38.1	25.8	32.2
	전적으로 동의한다	22.5	9.4	15.6	21.8	11.8	16.2
배우자(파트너)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8	9.0	9.8	7.7	12.2	8.7
	동의하지 않는다	15.8	18.9	18.7	15.8	21.7	18.2
	보통이다	28.0	41.8	31.0	27.2	36.4	32.9
	동의한다	37.1	23.6	27.0	33.8	20.9	28.5
	전적으로 동의한다	14.3	6.7	13.4	15.6	8.8	11.7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6	4.4	4.0	4.2	5.4	5.1
	동의하지 않는다	20.8	11.7	10.5	9.8	10.3	12.6
	보통이다	36.8	50.2	38.9	36.3	39.5	40.3
	동의한다	26.8	26.9	32.0	35.8	32.4	30.8
	전적으로 동의한다	8.0	6.8	14.6	14.0	12.4	11.2
배우자(파트너)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1	3.6	9.0	4.0	8.0	5.5
	동의하지 않는다	8.7	7.1	20.2	8.5	17.4	12.4
	보통이다	35.5	47.7	33.4	34.0	39.6	38.0
	동의한다	39.8	32.0	23.6	32.9	24.1	30.5
	전적으로 동의한다	12.9	9.6	13.7	20.6	10.9	13.5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3	1.6	2.5	1.8	3.1	1.9
	동의하지 않는다	0.6	2.7	4.3	3.7	5.8	3.4
	보통이다	6.4	22.5	17.7	17.0	26.0	17.9
	동의한다	32.8	38.2	39.9	38.2	40.0	37.8
	전적으로 동의한다	59.9	35.0	35.6	39.4	25.2	39.0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11〉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5개국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남성의 역할(확실히 남성+대체로 남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32.4%, 독일 30.5%, 한국 29.8%, 스웨덴 21.2%, 프랑스 14.3%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을 여성의 역할(확실히 여성+대체로 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독일 33.3%, 일본과 스웨덴 24.7%, 한국 22.8%, 프랑스 22.6% 순이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을 여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독일 36.8%, 스웨덴 29.9%, 프랑스 24.4%, 일본 23.2%, 한국 21.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은 남성의 역할로,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성역할 인식은 과거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존재한다.¹⁷⁾ 〈표 4-12〉에서는 5개국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남성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비율(A)에서 음식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을 여성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비율(B)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을 여성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비율(C)의 평균값 $((B+C)/2)$ 을 뺀 값을 사용하였다. 해당 값이 양수이면 남성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되는 경향, 음수이면 여성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는 해당 값이 음수로 나타나, 남성의 생계 부담보다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요구

17) 단적인 예로, 〈표 4-11〉 중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여성의 역할(확실히 여성+대체로 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을 남성의 역할(확실히 남성+대체로 남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7.7)과 일본(8.4)에서는 양수로 나타나,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보다 남성의 생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보다 남성의 생계 부담이 더 크게 요구되는 국가(한국,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향후 성역할 인식과 출산율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1〉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확실히 남성	6.4	9.4	6.4	12.1	6.1	8.1
	대체로 남성	23.4	23.0	7.9	18.4	15.1	17.5
	남성과 여성 모두	67.6	63.2	69.2	57.8	69.0	65.4
	대체로 여성	1.8	3.2	9.6	7.4	6.3	5.7
	확실히 여성	0.8	1.2	6.9	4.3	3.4	3.3
음식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확실히 남성	0.2	1.0	1.6	1.1	1.1	1.0
	대체로 남성	0.9	1.7	3.4	3.5	2.8	2.5
	남성과 여성 모두	76.1	72.6	72.4	62.1	71.4	70.9
	대체로 여성	19.6	20.2	15.4	23.5	17.4	19.2
	확실히 여성	3.2	4.5	7.2	9.8	7.3	6.4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	확실히 남성	0.3	0.7	1.5	1.0	1.1	0.9
	대체로 남성	1.0	1.5	2.1	2.5	2.0	1.8
	남성과 여성 모두	77.4	74.5	72.0	59.7	67.0	70.1
	대체로 여성	18.0	19.3	16.0	27.2	22.5	20.6
	확실히 여성	3.4	3.9	8.4	9.6	7.4	6.5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12〉 각 성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정도

(단위: %, %p)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전통적 남성 역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A)	29.8	32.4	14.3	30.5	21.2
전통적 여성 역할	음식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B)	22.8	24.7	22.6	33.3	24.7
	어린이자녀를 돌보는 일(C)	21.4	23.2	24.4	36.8	29.9
(B+C)/2		22.1	24.0	23.5	35.1	27.3
A-(B+C)/2		7.7	8.4	-9.2	-4.6	-6.1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제3절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제3절에서는 5개국의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표 4-13〉은 가사의 실제 분담 비율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담 비율을 보여준다. 공평하게 분담¹⁸⁾하고 있다(본인 50%, 상대 50%)고 응답한 비율은 18.8~36.7% 수준에 머물렀으며, 5개국 모두에서 예외 없이 본인이 상대보다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본인 60~100%)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본인이 상대에 비해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가 더 많이 분담(본인 0~40%)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 평균적으로 23.8%p 높았다.

이러한 〈표 4-13〉의 결과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5개국 모두에서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을 통해 특정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상대보다

18) 〈표 4-13〉에 제시된 총 11개의 선택지를 편의상 본인이 더 많이 부담(본인 60~100%)하는 경우, 공평하게 부담(본인 50%)하는 경우, 상대가 더 많이 부담(본인 0~40%)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가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평균적으로 23.8%p 높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7~59.0% 수준으로, 실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상대에 비해 더 많이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가 더 많이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에 비해 평균적으로 17.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⁹⁾

〈표 4-13〉 가사의 실제 및 적절 분담 비율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본인 0%, 상대 100%	실제	0.2	0.4	0.7	0.6	0.3	0.5
	적절	0.2	0.4	0.4	0.2	0.2	0.3
본인 10%, 상대 90%	실제	3.1	4.8	0.8	0.5	0.3	1.8
	적절	1.3	2.2	0.9	0.8	0.6	1.1
본인 20%, 상대 80%	실제	6.3	5.7	1.9	2.7	2.5	3.7
	적절	3.6	3.3	1.9	1.4	1.8	2.4
본인 30%, 상대 70%	실제	11.4	11.0	5.0	7.9	5.5	8.0
	적절	8.7	8.7	4.1	5.9	2.9	6.0
본인 40%, 상대 60%	실제	9.8	7.6	8.7	10.4	10.6	9.5
	적절	11.1	7.1	6.8	8.7	7.5	8.2
본인 50%, 상대 50%	실제	23.7	18.8	36.7	30.7	34.9	29.3
	적절	43.4	34.7	47.0	47.8	59.0	46.7
본인 60%, 상대 40%	실제	11.3	7.4	10.3	9.9	13.2	10.5
	적절	15.5	12.2	11.1	14.0	11.9	13.0

19) 동 비율의 차이는 한국(6.8%)에서 가장 작고, 프랑스(24.8%)에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본인 70%, 상대 30%	실제	12.7	11.2	11.8	13.6	12.7	12.4
	적절	7.6	12.5	9.4	10.2	7.1	9.3
본인 80%, 상대 20%	실제	11.1	14.2	12.2	11.1	10.4	11.7
	적절	4.2	9.2	9.2	5.6	4.4	6.5
본인 90%, 상대 10%	실제	8.0	13.1	7.3	8.3	6.4	8.5
	적절	3.2	6.8	5.3	3.3	2.3	4.1
본인 100%, 상대 0%	실제	2.5	5.8	4.6	4.4	3.3	4.1
	적절	1.1	2.9	3.9	2.3	2.3	2.5
계		100.0 (1,430)	100.0 (1,345)	100.0 (1,552)	100.0 (1,692)	100.0 (1,505)	100.0 (7,524)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3) 계 항목의 비율과 응답자 수는 실제와 적절 각각의 수치를 의미함.

다음으로, <표 4-14>는 육아의 실제 분담 비율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담 비율을 보여준다.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29.7%로 나타났으며, 가사 분담의 경우와 유사하게 스웨덴을 제외한 4개국에서 본인이 상대방보다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본인이 상대에 비해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가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 평균적으로 19.0%p 높았다.²⁰⁾ 이 외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육아 분담 비율에 대한 응답도 <표 4-13> 가사 분담의 경우와 유사하다.

20) 가사와 마찬가지로 육아에서도 본인의 기여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표 4-13>, <표 4-14> 해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4-14〉 육아의 실제 및 적절 부담 비율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본인 0%, 상대 100%	실제	0.3	0.1	0.6	0.2	0.4	0.3
	적절	0.2	0.1	0.4	0.1	0.4	0.2
본인 10%, 상대 90%	실제	5.2	3.9	0.4	1.3	0.4	2.1
	적절	1.5	2.4	0.6	0.8	0.5	1.1
본인 20%, 상대 80%	실제	9.5	6.5	1.7	4.0	2.8	4.7
	적절	3.7	4.1	1.3	2.1	1.9	2.6
본인 30%, 상대 70%	실제	15.2	10.6	4.6	10.0	6.6	9.2
	적절	11.7	7.5	4.2	6.1	4.0	6.5
본인 40%, 상대 60%	실제	9.9	8.0	8.7	11.5	9.1	9.4
	적절	16.1	9.7	8.0	8.5	7.7	9.8
본인 50%, 상대 50%	실제	14.9	22.7	39.1	27.6	41.2	29.7
	적절	37.4	36.7	48.3	45.2	60.5	45.9
본인 60%, 상대 40%	실제	10.4	8.1	10.9	9.2	14.4	10.6
	적절	13.9	13.0	10.7	13.6	9.2	12.0
본인 70%, 상대 30%	실제	10.7	11.0	11.0	10.6	10.1	10.7
	적절	8.6	11.0	9.3	10.2	7.7	9.4
본인 80%, 상대 20%	실제	11.0	14.1	10.7	12.6	7.6	11.2
	적절	3.4	8.1	8.5	6.7	4.0	6.3
본인 90%, 상대 10%	실제	9.9	12.5	7.5	9.0	4.4	8.6
	적절	2.5	5.9	5.3	3.5	2.4	4.0
본인 100%, 상대 0%	실제	3.1	2.6	4.9	3.9	3.2	3.6
	적절	1.0	1.6	3.7	3.1	1.6	2.3
계		100.0 (676)	100.0 (802)	100.0 (864)	100.0 (847)	100.0 (792)	100.0 (3,981)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3) 계 항목의 비율과 응답자 수는 실제와 적절 각각의 수치를 의미함.

〈표 4-15〉에는 5개국의 응답자들이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에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 제시하였다. 한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어려움을 느낀

다(어려운 편이다+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전혀 어렵지 않다+어렵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확인되었다.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57.6%), 일본(55.9%), 프랑스(47.3%), 스웨덴(23.2%), 독일(2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술할 표(제4장 제5절, <표 4-24>)에 따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제시된 정책들(육아휴직, 유연근로제,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17.0%)과 일본(19.1%)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고려했을 때, 한국과 일본에서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관련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4-15>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전혀 어렵지 않다	2.5	2.7	5.2	13.7	9.2	7.0
어렵지 않은 편이다	12.3	11.8	18.9	33.2	23.7	20.5
보통이다	27.6	29.7	28.5	32.0	44.0	32.4
어려운 편이다	43.5	41.2	38.9	17.9	20.7	31.8
매우 어렵다	14.1	14.7	8.4	3.3	2.5	8.3
계	100.0 (1,430)	100.0 (1,345)	100.0 (1,552)	100.0 (1,692)	100.0 (1,505)	100.0 (7,524)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5개국 모두에서 여성인 경우, 30대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적 생활 수준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의 남녀 간 격차가 5개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주요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 간 역할 분담의 불균형은 여성의 경력 지속이나 출산·양육 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²¹⁾

〈표 4-16〉 응답자 특성별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성별	남성	48.6	47.3	39.2	18.0	19.7	33.5
	여성	66.9	62.7	55.0	24.6	26.4	46.4
연령	20대	44.6	53.0	34.5	17.1	17.9	29.9
	30대	63.4	59.1	52.5	24.6	26.0	43.1
	40대	57.7	54.6	50.8	20.6	23.9	43.0
자녀 유무	있음	61.1	56.2	49.9	23.5	25.6	42.7
	없음	52.1	54.9	41.5	17.5	18.1	35.0
경제적 생활 수준 인식	여유로움	53.2	52.7	43.8	16.9	19.6	36.4
	어려움	65.2	66.1	55.3	31.3	28.1	47.6
계		100.0 (1,430)	100.0 (1,345)	100.0 (1,552)	100.0 (1,692)	100.0 (1,505)	100.0 (7,524)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17〉에서는 5개국 응답자들의 돌봄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다. 이는 국가별 또는 응답자별로 돌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에 대한 돌봄을 주로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주로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각국의 돌봄 관련 정책

21) 〈표 4-4〉, 〈표 4-6〉에서 한국 여성의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남성에 비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의 방향이나 제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취학 아동 돌봄을 사회가 해야 할 일(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5% 미만이었으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는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60% 이상이었으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는 40~50%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이 유럽 3개국에 비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에 있어 사회와 가족 모두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별 인식도 미취학 아동 돌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66.6%)과 일본(70.3%)에서는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 돌봄을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럽 3개국(프랑스 40.2%, 독일 40.1%, 스웨덴 51.0%)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등, 어느 한 주체만의 역할보다 사회와 가족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러한 국가 간 차이와는 별개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 양상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7〉 돌봄의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1.6	1.4	4.2	3.6	4.4	3.0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3.2	2.7	8.8	10.0	11.0	7.1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66.4	62.9	42.6	49.8	54.6	55.3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18.7	19.5	26.6	25.6	21.7	22.4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10.0	13.6	17.8	11.1	8.4	12.2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3.7	1.7	2.8	1.6	6.8	3.3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12.4	5.5	8.4	7.2	18.0	10.3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66.6	70.3	40.2	40.1	51.0	53.6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11.8	15.2	28.0	33.0	17.4	21.1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5.4	7.4	20.6	18.0	6.8	11.7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제4절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제4절에서는 5개국의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표 4-18>에는 인구 변화와 관련된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를 제시하였다. 최근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문항에 동의한다(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개국 평균 22.4%이며, 국가별로는 한국(7.8%), 일본(9.7%), 독일(23.1%), 프랑스(34.7%), 스웨덴(36.9%) 순으로 낮았다. 이 중 한국과 일본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각각 0.72명, 1.20명으로,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출산율 감소가 나의 삶과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각각 5개국 평균 30.2%, 57.9%로,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2배 높았다. 또한, 두 문항 모두 5개국 중 한국과 일본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정부가 출산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5개국 평균 17.2%이며, 한국(7.7%), 일본(9.5%) 순으로 낮았다.

〈표 4-18〉에 나타난 응답 경향은 각국의 합계출산율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5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낮고, 출산율 감소가 나의 삶과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출산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크고,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최근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율 감소가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인 경우, 출산율 감소가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인 경우, 경제적 생활 수준이 여유롭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4-18〉 인구 변화 및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4.7	18.7	4.8	10.1	2.9	16.2
	동의하지 않는다	34.5	40.0	19.0	29.2	13.9	27.3
	보통이다	13.0	31.6	41.6	37.6	46.3	34.0
	동의한다	6.0	7.9	27.0	18.4	28.8	17.6
	매우 동의한다	1.8	1.8	7.7	4.7	8.1	4.8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3	7.2	17.1	11.5	14.0	12.0
	동의하지 않는다	20.5	16.8	19.9	20.2	19.7	19.4
	보통이다	33.4	42.2	36.9	34.9	44.4	38.4
	동의한다	23.9	25.6	18.7	25.4	16.3	22.0
	매우 동의한다	11.9	8.2	7.4	8.0	5.7	8.2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3	2.3	6.9	3.9	5.4	4.4
	동의하지 않는다	5.5	5.5	10.8	9.6	11.5	8.6
	보통이다	15.6	28.5	33.2	25.5	42.7	29.1
	동의한다	38.4	38.2	35.8	40.6	29.1	36.4
	매우 동의한다	37.2	25.4	13.4	20.4	11.3	21.5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3.5	30.1	12.1	18.6	9.8	22.8
	동의하지 않는다	28.2	26.7	18.6	22.8	16.3	22.5
	보통이다	20.6	33.7	41.4	38.8	52.8	37.5
	동의한다	6.3	7.8	19.1	14.0	14.8	12.4
	매우 동의한다	1.4	1.7	8.8	5.9	6.2	4.8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다음으로, <표 4-19>에서는 사회의 불공정 및 불평등 정도에 대한 5개국 응답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사회가 불공정하고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낄수록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출산율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응답자가 자신이 속한 나라가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57.4%)에서 가장 높고, 스웨덴(23.9%)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한다(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80.0%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이 26.1%로 가장 낮았다. 마찬가지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진 자산이 너무 많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한국(80.1%)에서 가장 높았고, 스웨덴(55.6%)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5개국 중 한국에서 불공정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뚜렷함을 보여주며, 이는 한국이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경우, 출산에 대한 태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공정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에서는 특히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적 생활 수준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사회의 불공정 및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8.1	12.5	12.6	11.6	5.0	12.0
	동의하지 않는다	39.3	32.8	29.4	29.5	18.9	30.0
	보통이다	33.0	41.0	29.0	30.3	28.9	32.5
	동의한다	9.0	11.6	22.8	23.6	38.2	21.0
	매우 동의한다	0.6	2.1	6.2	5.0	9.0	4.6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6	1.8	2.4	3.2	13.6	4.3
	동의하지 않는다	3.0	7.4	6.6	9.6	32.8	11.9
	보통이다	16.5	35.4	21.6	24.8	27.5	25.2
	동의한다	52.2	38.8	39.1	36.0	19.7	37.2
	매우 동의한다	27.8	16.6	30.3	26.4	6.4	21.5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진 자산이 너무 많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3	1.9	3.6	3.0	3.7	2.7
	동의하지 않는다	2.6	6.4	6.1	5.9	8.3	5.9
	보통이다	16.0	35.3	22.1	24.0	32.4	26.0
	동의한다	36.2	34.8	28.6	29.7	29.8	31.8
	매우 동의한다	43.9	21.5	39.6	37.4	25.8	33.6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20〉에는 개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였다. 〈표 4-20〉에 제시된 요인들은 개인의 노력과 그 외 요인²²⁾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 96.6%, 일본 94.1%, 프랑스 95.1%, 독일 95.5%, 스웨덴 93.9% 등 5개국 모두에서 여러 요인들 중 개인의 노력이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상당히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필수적이다)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5개국 모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낮은 요인은 성별(평균 60.8%)로 나타났으며, 그 외 요인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개국에서 평균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87.4%), 부유한 가정(85.6%), 정치적 인맥(67.3%),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64.0%) 순으로 높았다.

〈표 4-20〉에 제시된 각각의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 값은 국가별로 독일(83.4%), 프랑스(80.3%), 한국(79.7%), 스웨덴(71.1%), 일본(68.9%) 순으로 나타나, 독일 응답자들이 개인의 성공에 있어 다양한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그 외 요인은 부유한 가정,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정치적 인맥,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을 포함한다.

한편, <표 4-19>에서는 불공정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5개국 중 한국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유사한 경향이 <표 4-20>에서도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부유한 가정,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가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한국에서 가장 높았다. 출신 배경이나 가정 환경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인식한 비율이 한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불공정 및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뚜렷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향후 출산율 개선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긴다고 볼 수 있다.

<표 4-20> 성공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부유한 가정	전혀 중요하지 않다	0.2	2.1	3.9	2.2	5.1	2.7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	3.6	18.0	8.3	3.4	25.0	11.7
	상당히 중요하다	27.2	45.0	37.2	26.1	36.4	34.4
	매우 중요하다	43.4	24.8	35.3	51.8	23.9	35.8
	필수적이다	25.6	10.1	15.3	16.6	9.6	15.4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3	2.2	1.4	1.6	3.0	1.7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	5.5	20.6	4.6	7.2	16.9	11.0
	상당히 중요하다	28.6	42.8	26.0	28.1	39.9	33.1
	매우 중요하다	42.5	24.4	38.3	45.9	30.2	36.3
	필수적이다	23.1	10.1	29.7	17.2	10.0	18.0
개인의 노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0.4	1.2	1.4	1.2	0.9	1.0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	3.1	4.6	3.5	3.4	5.2	4.0
	상당히 중요하다	24.9	36.6	24.1	18.2	25.7	25.9
	매우 중요하다	35.5	31.2	37.3	40.7	37.4	36.4
	필수적이다	36.2	26.3	33.7	36.6	30.8	32.7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정치적 인맥	전혀 중요하지 않다	3.2	7.9	9.8	5.4	12.2	7.7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	19.9	30.2	24.9	18.4	31.8	25.1
	상당히 중요하다	36.2	39.6	33.1	38.0	29.9	35.4
	매우 중요하다	26.4	16.6	21.4	26.0	17.7	21.6
	필수적이다	14.4	5.7	10.8	12.2	8.3	10.3
성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3.5	14.6	13.3	13.5	15.6	14.1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	32.2	36.0	18.1	15.1	24.3	25.1
	상당히 중요하다	31.9	35.4	35.4	38.0	35.6	35.3
	매우 중요하다	15.8	10.6	20.9	24.2	16.8	17.7
	필수적이다	6.6	3.5	12.2	9.2	7.6	7.8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전혀 중요하지 않다	11.0	12.7	13.6	13.3	13.7	12.8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	29.4	36.4	15.1	15.1	19.4	23.1
	상당히 중요하다	34.3	35.0	33.3	34.6	34.0	34.2
	매우 중요하다	18.1	12.1	24.7	25.8	22.0	20.5
	필수적이다	7.2	3.8	13.3	11.2	11.0	9.3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21〉은 부모 세대와 비교해 현재 자신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삶의 질 변화에 대한 5개국 응답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가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결혼과 출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일본(24.5%), 프랑스(43.6%), 독일(49.5%), 스웨덴(58.1%) 4개국에서는 부모 세대에 비해 현재 자신의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훨씬 좋아졌다+약간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계수가 0.54로 나타났다. 즉, 부모 세대에 비해 생활 수준이 나아졌다고 생각하

는 비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반면, 2023년 기준, 5개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한국에서는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로 오히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등이 반영된 예외적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1〉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부모 세대와 본인 세대)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훨씬 좋아졌다	26.5	5.0	16.0	17.6	19.7	17.0
약간 좋아졌다	34.6	19.5	27.6	31.9	38.4	30.4
차이가 거의 없다	20.2	35.7	27.7	27.0	21.4	26.4
약간 나빠졌다	10.4	23.0	17.6	16.0	14.7	16.3
훨씬 나빠졌다	8.3	16.8	11.2	7.5	5.8	9.9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22〉는 자녀 세대가 응답자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생활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표 4-21〉과 마찬가지로 세대 간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더 좋아질 것(훨씬 좋아질 것이다+약간 좋아질 것이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스웨덴이 55.0%로 가장 높았고, 한국과 프랑스가 각각 42.3%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일본은 16.9%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다만, 이러한 인식과 합계출산율 간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자녀의 미래를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0

명으로, 자녀에 관한 전망이 더 긍정적인 한국의 합계출산율(0.72명)보다 오히려 높았다. 스웨덴 역시 합계출산율이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자녀 세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그 영향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²³⁾

〈표 4-22〉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본인 세대와 자녀 세대)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훨씬 좋아질 것이다	14.1	2.9	13.4	13.0	16.8	12.1
약간 좋아질 것이다	28.2	14.0	28.9	26.6	38.2	27.2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28.8	36.9	29.9	34.2	26.3	31.2
약간 나빠질 것이다	17.4	29.9	16.2	18.7	14.6	19.4
훨씬 나빠질 것이다	11.5	16.3	11.6	7.5	4.0	10.2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제5절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제5절에서는 5개국 응답자들의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표 4-23〉에서는 정부의 인구 관련 정책을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각 영역의 정책을 알고 있다(조금 안다+상당히 안다+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5개국에

23) 실제로,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계수는 0.20 수준으로, 연관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서 평균적으로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가 82.7%, 자녀에 대한 수당(아동수당, 가족수당 등)이 81.4%, 임신, 출산 지원(의료보험 등)이 75.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은 52.1%, 세금을 통한 지원(세금 경감)은 66.5%,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은 68.4%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5개국 모두에서 일관되었으며, 예외 없이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또는 자녀에 대한 수당의 인지도가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았고,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스웨덴(78.3%), 독일(77.7%), 프랑스(74.4%), 한국(66.4%), 일본(58.1%) 순으로 나타났다.²⁴⁾ 이러한 인지도 수준은 각국의 합계출산율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⁵⁾ 본 결과는 상관성에 국한되며, 인과성은 단정할 수 없으나, 정책 설계 및 홍보 시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3〉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임신, 출산 지원 (의료보험 등)	전혀 모른다	6.9	9.5	10.2	5.2	6.6	7.7
	거의 모른다	22.8	25.1	13.5	10.7	11.3	16.7
	조금 안다	49.2	52.1	36.8	32.3	31.0	40.3
	상당히 안다	18.0	10.6	28.0	35.0	31.1	24.5
	매우 잘 안다	3.2	2.7	11.5	16.8	20.0	10.8

24) 〈표 4-23〉에 제시된 각 영역의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 값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25) 실제로, 5개국의 합계출산율 수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 간 상관계수는 0.55로 나타났다.

98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출산을 하였을 경우 수당이나 물품 지급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등)	전혀 모른다	6.9	11.2	11.8	10.4	8.1	9.7
	거의 모른다	20.8	29.0	18.5	22.6	15.3	21.2
	조금 안다	47.1	47.3	35.2	33.0	34.0	39.3
	상당히 안다	20.8	10.4	24.1	23.8	27.6	21.3
	매우 잘 안다	4.4	2.2	10.3	10.1	15.1	8.4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전혀 모른다	4.4	8.7	5.7	2.5	3.8	5.0
	거의 모른다	15.6	20.9	9.9	6.2	8.8	12.3
	조금 안다	49.2	53.0	38.4	24.6	27.7	38.6
	상당히 안다	25.1	14.1	32.0	37.5	32.1	28.1
	매우 잘 안다	5.6	3.4	14.0	29.2	27.7	16.0
어린이집 지원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전혀 모른다	7.8	10.1	10.6	5.2	6.8	8.1
	거의 모른다	23.2	28.6	19.3	13.4	15.4	20.0
	조금 안다	44.6	45.9	36.8	34.2	34.6	39.2
	상당히 안다	20.6	12.3	23.7	33.2	28.7	23.7
	매우 잘 안다	3.8	3.1	9.6	14.0	14.4	9.0
자녀에 대한 수당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전혀 모른다	7.2	8.6	6.2	2.4	4.2	5.7
	거의 모른다	20.9	20.4	11.0	4.5	7.9	12.9
	조금 안다	42.3	48.7	37.2	24.6	27.5	36.1
	상당히 안다	24.3	17.9	30.4	36.5	34.8	28.8
	매우 잘 안다	5.4	4.4	15.2	32.0	25.7	16.5
세금을 통한 지원 (세금 경감)	전혀 모른다	10.9	12.0	10.1	6.0	10.8	9.9
	거의 모른다	32.9	32.6	15.8	15.5	20.8	23.5
	조금 안다	39.0	42.8	35.4	32.5	35.4	37.0
	상당히 안다	15.0	10.4	27.0	30.9	21.4	20.9
	매우 잘 안다	2.2	2.2	11.7	15.1	11.6	8.6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전혀 모른다	8.1	19.5	9.9	9.6	5.5	10.5
	거의 모른다	22.4	36.3	14.0	19.9	12.8	21.1
	조금 안다	43.9	34.6	35.9	35.0	31.5	36.2
	상당히 안다	21.0	8.0	27.8	25.3	30.1	22.5
	매우 잘 안다	4.5	1.6	12.4	10.3	20.0	9.8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전혀 모른다	19.6	22.1	19.7	22.9	16.2	20.1
	거의 모른다	38.4	41.1	18.6	21.3	19.6	27.8
	조금 안다	30.0	29.3	32.5	30.5	35.2	31.5
	상당히 안다	9.7	5.9	19.4	16.6	19.3	14.2
	매우 잘 안다	2.2	1.6	9.8	8.6	9.6	6.4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표 4-24〉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 중, 직장생활과 관련된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해당 문항은 5개국의 응답자가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되, 본인이 활용한 경험이 없다면 주변 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은 5개국 평균적으로 출산휴가(38.6%), 여성의 육아휴직(36.2%), 남성의 육아휴직(23.6%), 가족돌봄휴가(19.3%), 유연근로제(18.7%) 순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표 4-24〉에 제시된 정책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독일(39.4%), 스웨덴(32.2%), 프랑스(28.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본(19.1%)과 한국(17.0%)에서 낮은 편이었다. 특히 한국은 출산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정책 모두에서 활용 가능성이 5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들 중 해당 정책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을 제외한 4개국 평균값에 비하여 여성의 육아휴직은 16.5%p, 남성의 육아휴직은 19.0%p, 유연근로제는 10.3%p, 가족돌봄휴가는 10.5%p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별 정책 활용 가능성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계수는 0.66으로, 높은 수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실제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출산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은 출산휴가를 제외한 4개 정책 모두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개국 중 가장 낮았으며, 이 수치는 다른 4개국의 평균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준은 제도 자체의 유무뿐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²⁶⁾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4〉 일·가정 양립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여성의 육아 휴직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6.0	9.1	19.6	23.2	14.0	14.4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17.1	20.1	17.8	30.2	23.8	21.8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36.3	35.9	26.3	14.4	22.3	27.1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24.8	10.6	15.0	11.3	13.6	15.1
	전혀 활용하지 못함	10.2	5.0	8.9	9.6	8.1	8.4
	모르겠음	5.6	19.2	12.4	11.2	18.2	13.3
남성의 육아 휴직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1.9	3.5	12.7	12.7	9.9	8.1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6.6	9.0	16.5	23.1	22.0	15.4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21.2	35.2	27.3	23.5	28.6	27.1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39.2	21.9	21.4	20.0	15.5	23.6
	전혀 활용하지 못함	25.4	9.7	9.1	10.1	6.4	12.1
	모르겠음	5.8	20.7	13.0	10.6	17.7	13.6

26) 〈표 4-15〉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제도들의 낮은 활용 가능성이 그 주요 요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유연 근로제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2.7	3.7	7.9	9.6	6.7	6.1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7.8	9.0	11.0	18.4	16.8	12.6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26.1	32.7	27.2	31.7	30.4	29.6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35.8	23.4	27.3	20.0	18.3	25.0
	전혀 활용하지 못함	19.5	10.0	15.2	9.7	10.3	12.9
	모르겠음	8.1	21.3	11.4	10.5	17.5	13.8
출산 휴가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11.1	11.3	15.5	29.2	17.8	17.0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21.0	17.5	18.1	25.0	26.4	21.6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34.8	34.3	27.6	14.7	21.2	26.5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18.8	13.2	17.1	12.1	14.9	15.2
	전혀 활용하지 못함	9.4	5.4	9.4	9.2	7.9	8.3
	모르겠음	4.9	18.2	12.4	9.8	11.9	11.5
가족 돌봄 휴가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3.4	3.7	10.2	9.5	7.2	6.8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7.5	8.6	13.4	16.2	16.6	12.5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22.0	29.6	27.3	22.4	29.0	26.1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34.5	22.6	23.7	18.8	18.3	23.6
	전혀 활용하지 못함	22.6	11.1	10.8	12.4	9.2	13.2
	모르겠음	10.0	24.4	14.5	20.8	19.8	17.9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마지막으로, <표 4-25>에는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였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대폭 늘려야 한다+조금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79.3%), 독일(72.8%), 스웨덴(69.1%), 일본(67.3%), 프랑스(6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국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한국에서 가장 낮고(0.72명), 프랑스에서 가장 높다(1.64명)는 것을 고려하

면, <표 4-25>의 결과는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관련 예산 증액 요구가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⁷⁾

<표 4-25>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계
대폭 늘려야 한다	51.7	34.2	25.9	41.0	30.8	36.7
조금 늘려야 한다	27.6	33.1	35.2	31.8	38.3	33.2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15.3	24.6	30.9	21.8	26.3	23.8
조금 줄여야 한다	3.2	4.0	4.6	3.5	3.1	3.7
대폭 줄여야 한다	2.2	4.1	3.4	2.0	1.5	2.6
계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2,500)	100.0 (12,500)

주: 1)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5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결혼 및 출산 의향은 국가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결혼 의향은 한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았으며, 출산 의향은 한국과 일본에서 상

27) 5개국의 합계출산율 수준과 예산 증액에 대한 요구 간 상관계수는 -0.87로 나타났다.

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인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인식하는 경우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국은 결혼 및 출산 의향 모두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성별 격차 해소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가족계획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 주거 여건을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특히 한국은 11개 요인 각각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이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개국 모두에서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긍정적 인식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정적 인식이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은 존재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이 실제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두 항목 모두에서 5개국 중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등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동시에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식에서는 이상과 현실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5개국 모두에서 공평한 분담을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상대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자가 체감하는 분담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응답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과 가사 및 육아의 병행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한국과 일본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의 활용 가능성이 한국과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관련 제도의 실질적 이용 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단순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넘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돌봄에 대한 견해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났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돌봄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가족과 사회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은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의 역할도 함께 요구하는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주도의 돌봄을 전제로 하되 사회가 경제적 지원 등의 형태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수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국가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최근 출산율이 적당하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전체 평균 22.4%였으나, 한국(7.8%)과 일본(9.7%)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가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평균 57.9%로, 한국과 일본에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부 대응이 충분하다는 인식은 이들 국가에서 10%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한국은 사회의 공정성 부족(57.4%), 소득 격차(80.0%), 상위 1% 자산 집중(80.1%) 등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불안, 정부에 대한 불신 등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특히 여성, 고연령층,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된다면, 출산에 대한 태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5개국 모두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그 외 요인을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 세대가 응답자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부모 세대에 비해 현재 자신의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출산을 결정할 때 자녀의 먼 미래 여건보다는 현재 자신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과 양육 환경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이나 미래 세대의 여건 개선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육아 지원책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가능성, 예산 투입 등에 있어 국가 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는 프랑스(78.3%)에서 가장 높았고, 한국(66.4%), 일본(58.1%)에서 낮은 수준이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의 활용 가능성도 한국(17.0%)과 일본(19.1%)에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은 출산휴가를 제외한 4개 정책 모두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개국 중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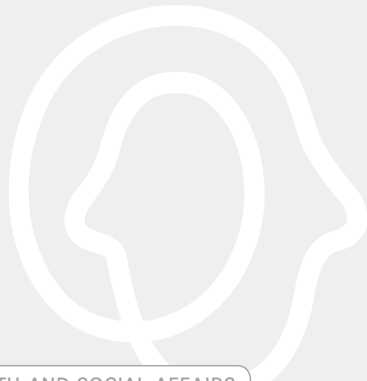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활용 가능성 모두 합계출산율과 높은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이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낮은 활용 가능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관성은 인과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정책 설계 및 홍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고려될 여지는 있다. 이에 따라 인지도 및 활용 가능성 제고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한국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출산율 반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해외 4개국(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주요 인구통계 지표와 함께 인구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 4개국 국민들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한국과 비교하였다.

한국 및 해외 4개국의 주요 인구통계 지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인구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약 50년간 5개국 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으며, 독일은 총인구가 약 50년간 큰 변화 없이 완만히 증가하여 5개국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유소년 인구 비율이 50여 년간 30%p 이상 하락하였으며, 일본은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 폭이 50여 년간 20%p 이상으로 5개국 중 가장 컸다. 중위연령은 50여 년간 5개국 모두에서 증가하였는데, 증가 폭은 26.8세를 기록한 한국에서 가장 컸다. 또한, 조혼인율은 5개국 모두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초혼연령은 같은 기간 5개국 모두에서 상승했다. 2000년 대비 2021년 출생아 수는 5개국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은 한국(379,527명)에서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출산 시 모의 평균연령은 5개국 모두에서 상승하였으며, 상승 폭은 한국(4.3세)에서 가장 컸다.

제3장에서 살펴본 해외 4개국의 인구정책 현황에서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해당 내용은 이미 발간한 국가별 연구의 내

용을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제4장의 인식 조사 결과에 비중을 두고 도출하였다.

한국과 해외 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결혼 및 출산 의향은 국가 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한국은 결혼 및 출산 의향 모두에서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5개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책이 성별 격차 해소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개국 모두에서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긍정적 인식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정적 인식이 동시에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두 항목 모두에서 동의율이 가장 높아, 출산을 막는 현실적 제약이 특히 두드러졌다. 따라서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과 가사 및 육아의 병행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한국과 일본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관련 제도의 유무만이 아니라 실질적 이용 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활용 가능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에 대한 견해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가족과 사회의 책임을 모두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향후 관련 정책이 가족 주도의 돌봄을 전제로 하되 사회가 경제적 지원 등의 형태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수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5개국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불안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 회복이 출산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이현 (2019). 스웨덴 모델의 진화와 재구성.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논문.
- 남현주 (2023). 이민자의 국가 독일, 출산율 회복의 성공모델. 한반도미래연구원.
- 신영규, 조성호, 변영환, 남운재, 김우성 (2024).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최인선, 이지혜, 손동기, 김영아 (2024).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인구정책연구실 (2018).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박보미 (2011).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보혜, 권영지, 김유희, 박은정, 김은정 (2024).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경덕, 오신휘, 조성호, 김명중, 김원경, 황남희 (2024).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International Cases of Population Policies

Project Head: Choi, Kyong Duk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long period of declining birth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resulting in a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 The total fertility rate has continued to decline, reaching 0.75 as of 2024, while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surpassed 20% in the same year.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number of policies since the enactment of a law in 2005 but has failed to reverse the declining birthrate trend.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demographic changes and policies of Japan, France, Germany, and Sweden, providing basic data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Korea's population policy. In addition, by reviewing the results of perception surveys conducted among people in Korea and the four countries, the study seek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e ke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uture policies should focus on closing gender gaps and creating a family-friendly environment, while easing negative views on child-

birth and strengthening practical support. It is important that family-friendly policies ensure not only their existence but also real accessibility and usability. Care policies may be more effective if based on family-led caregiving, with financial and social support provided by society. Lastly, rebuilding social trust and fairness could positively influence attitudes toward childbirth.

Keywords: Population Policy, Low Fertility, Population Aging, Perception Survey